

碩士學位請求論文

統一環境의 變化에 따른 中等學校에서의
統一教育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全 寅 鳳

1992年 8月

統一環境의 變化에 따른 中等學校에서의
統一教育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全 寅 鳳



全寅鳳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抄 錄〉

統一環境의 變化에 따른 中等學校에서의 統一教育에 관한 研究

全 寅 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指導教授 高 性 俊

本 論文은 統一環境의 變化에 따른 中等學校에서의 새 統一教育의 方向을 제시하고자 하는 研究論文이다.

탈냉전·탈이념화하고 있는 세계질서에서 한반도도 반목과 갈등,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전향적이고 민족적 차원에서 統一로 향한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므로 平和統一의 선행단계는 참된 평화공존의 구현이고 統一은 共存이라는 역사적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할 때에 비로서 가능한 것이며 앞으로의 統一教育도 이러한 方向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오늘날 민족 통합의 길목에서 현실적으로 직면한 접근이 統一인가 共存인가 할때 스스로없이 統一의 밑거름인 남북한간의 共存의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統一教育은 바로 共存教育을 통하여 북한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길만이 올바른 統一教育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共存은 직접적인 적대감정을 해소시켜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해서만이 이룩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共存教育은 統一을 앞당길 수 있는 교육이며 統一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고 또 統一후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볼 수 있다.

目 次

抄 錄	
I. 序 論	1
1. 問題의 提起	1
2. 研究의 目的 및 方法	4
II. 統一環境의 變化	6
1. 國際 情勢의 大轉換	6
1) 脫冷戰 時代의 展開	6
2) 社會主義圈의 變化	9
2. 北韓의 變化와 南北韓關係의 進展	11
3. 統一意識의 變化	17
III. 現行 中等學校 統一教育의 現況과 問題點	23
1. 統一教育의 目標와 內容	23
1) 統一教育의 目標	23
2) 統一教育의 內容	25
2. 統一教育의 方法	28
1) 注入式 指導方法	29
2) 探究式 指導方法	30
3. 統一教育의 問題點	33
IV. 새 統一教育의 方向과 改善方案	41
1. 새 統一教育의 方向	41
1) 民主市民을 培養하는 統一共存教育	47

2) 民族同質性 回復을 위한 統一共存教育	50
3) 民族共同體를 指向하는 統一共存教育	53
2. 改善方案	57
1) 教育内容面	57
2) 教育方法面	61
V. 結論：要約 및 提言	74
1. 要約	74
2. 提言	76
參考文獻	78
Abstract	83



表 目 次

表1. VTR 影像資料(例示)	66
表2. 授業指導案(例示)	67
表3. 時事資料(例示)	69
表4. 授業指導案(例示)	70
表5. 討議學習授業指導案(例示)	73

그림 目 次

그림1. 指導方法模型	29
-------------------	----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추세는 국가간 관계에 있어 분쟁과 대립이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협력과 상호의존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해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신데탕트 시대의 전개라고 볼 수 있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흐름은 그 동안 이데올로기에 의해 경직되어온 한반도 주변의 국제환경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특히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소련의 붕괴는 북한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에 틀림 없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분명 우리민족 모두의 염원이고 민족사적 요청인 동시에 과제인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세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반도와 같이 세계2차대전후 “분열된 세계속의 분단된 국가(Die geteilte Nation in der gespaltenen Welt)”¹⁾였던 냉전체제의 상징이던 독일이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해 ‘분단 45년’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역사적인 통일을 성큼 이룩함은 분단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단 민족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오늘의 역사현실 앞에서 깊은 반성과 함께 우리의 통일의식 변화에 많은 시사점을 주어 새통일교육의 방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각계 각층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즉 통일을 위한, 또는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1) W. Conze (1958), *Die deutsche Nation(Göttingen : Vandenhoeck and Ruprecht)*, pp.145~164.
참조.

에 대한 논의가 과거의 통일 교육에 대한 자성과 비판의 소리와 아울러 최근에 매우 활발해져 가고 있다. 즉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심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서 중·고등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현재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독일의 통일이 1990년에 이루어졌지만, 서독의 각급 학교가 통일을 앞당기고 그에 대비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앞서 1978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준다.²⁾ 서독은 1978년에 연방 정부가 통일을 위한 교육 지침을 공포하여 각급 학교로 하여금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가르치고, 동독 주민들의 생활과 동독에 관한 제반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에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는 한편 동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여 나갔다.

만약 서독과 동독이 각기 자라나는 세대와 국민들에게 상대방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가르치고,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요, 반민족적 집단으로 가르쳤다면 독일의 통일은 이루지도 못했을 것이다. 또한 외부의 힘에 의하여 혹시 통합되었다 해도 분열과 반목으로 참다운 통일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신의 통합 없이는 물리적 통합을 실현시키기도 어려우며, 설령 인위적으로 물리적 통합을 성취하였다 해도 정신적 원심력의 작용 때문에 참다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재분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통일국가가 분열하는 사례를 역사는 얼마든지 보여준다. 그러므로 교육이 뒷전에 머물러 있는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다. 교육은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³⁾

물론 그들과 우리는 역사적 환경과 여건이 같지 않으나, 그동안 우리의 통일 교육은 승공통일 교육·체제 경쟁적인 우월주의적 통일 교육을 해왔으며 교육부의 통일

2) 이종서(1990), "독일의 통일과 교육", 「새교육」 1월호, pp.85~90.

3) 김신일(1991), "민족 통일에 대비하는 사회 교육," 사회 교육연구 제16권, 한국사회교육협회, p.49.

교육 지침은 '통일'과 '안보'의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이념간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실제 지도 장면에서는 곧잘 갈등 상황에 직면 하기도 한다.

신국제 질서의 대두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90년대에 들어서서 남북한간에 다시 공식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어 1990년 9월에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인 총리 회담은 두 정부간의 접촉이라는 점에서 과거 어떤 접촉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UN총회에서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이 마침내 실현되었고, 12월에 들어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기본합의서의 교환으로 평화공존을 다짐하는 「남북합의서」의 교환과 12월 31일 판문점에서 핵관련 제3차 대표접촉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최종 합의하여 한반도에서의 비핵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남북합작회사설립 등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국제 사회에서의 남북한 공존시대가 열리게 됨으로써 모처럼 남북한 관계에 희망의 싹이 보이고 통일이 가시화되는 디딤돌이 되고 있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던져준 진전이였다.

평화와 화해를 모색하는 국제 관계의 흐름, 그리고 남북 합의서 발효 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한반도 정세를 볼 때, 이제 통일 교육은 우리 시대의 실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오용이 통일의 크나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제도상 혹은 정책상의 통일 노력에 병행하여 통일 교육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우리가 통일 교육을 증시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통일이라는 당위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필연적으로 뒤 따르게 될 고통과 갈등, 혼란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

통일 교육의 목적은 통일에 대한 합리적 태도와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 기능을 배양하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통일을 앞당김과 동시에 통일 이후에

나타나게 될 문화 지체 현상을 최소화하여 단순한 지리상의 통일이 아닌 정신 문명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통일환경의 변화 및 통일 논의의 활성화 그리고 통일의식의 변화는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국제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동북아의 정치환경변화 및 한반도 통일문제 접근 방식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의 신중한 방향모색과 실천은 그 의미가 크다할 것이다.⁴⁾

2. 研究의 目的 및 方法

탈냉전·탈이념화하고 있는 세계질서에서 우리 한반도도 반목과 갈등, 소모적인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민족화해와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국내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이때 통일자체를 재음미하고 통일교육도 새롭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992년은 우리에게 민족통일의 한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외정세는 분단당시와 판이하게 다를 뿐 아니라 소연방의 붕괴는 공산주의 체제의 총체적 몰락을 의미하며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냉전이 종식됐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 합의서는 최후의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도 냉전종식이 시작했음을 알리고 있다. 달라진 여건 아래서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변화로 우리는 지금까지 교수해 오던 통일교육을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전제아래서 본고는 실제로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비판적 사고가 배제된 통일교육으로서의 이념교육과 과거와

4) 교육개혁심의회(1987), "교육개혁 종합구상", 최종보고서 II, pp.269~270.
교육개혁심의회에서도 통일된 조국에 적용하고 이를 앞당길 수 있는 국민을 기르기 위한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촉구하고 있다.

달라진 통일환경과 통일의식의 변화등을 개괄하여 보아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의 新思考가 필요하듯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추구해야할 평화공존시대 및 향후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新思考가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현행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새 통일 교육의 방향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등통일교육에 대한 문헌연구와 중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는 종래의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중등학교에서의 교과서 분석에서는 현행 통일교육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논문의 구성은 제5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제2장에서는 국제정세의 전환에 따른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통일의식의 변화를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현행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새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통일공존교육을 통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제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요약 및 바람직한 통일공존교육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II. 統一環境의 變化

1. 國際 情勢의 大轉換

1) 脫冷戰 時代의 展開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있던 냉전체제가 재편되어 세계는 적어도 경제 운영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제도가 사회주의권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경제적 실용주의가 보편적 가치관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탈 이데올로기화 현상은 그동안의 냉전질서속에서 국가간 긴장과 군사적 대결의 상황은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80년 후반부터 강대국들이 이념적 차원에서나 국가이익차원에서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온세상은 급속히 데탕트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경쟁·대결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각 나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두드러지는 협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국가관계가 대결에서 협력관계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국가의 영향력의 기초는 군사력으로부터 경제적 생산능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 핵무기를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보다 컴퓨터를 더 싸고 좋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더 큰 영향력을 국제사회에서 행사하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력 지배시대는 국제관계의 게임규칙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는 '세력균형 체제'에서 '이익균형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동맹관계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세계는 지금 소련방의 해체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으로 이른바 "알타체제"로 지칭되던 동·서 냉전체제가 완전히 해체되고 대신에 평화공존과

초국가적 협조관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개편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각국의 국내질서 역시 크게 개편되고 있다. 기존체제의 성격이 어땠든 간에 저마다 개방화·다원화·민주화를 지향한 체제변혁의 진통을 나름대로 겪고 있으며 이러한 세기적 격변의 와중에서 유럽에서는 이미 동·서독이 통일되었고, 그 물결이 한반도에도 파급되어 분단해소를 지향한 남북한 관계의 발전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⁵⁾

실제로 냉전시대에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극히 제약되어 있었다. 특히 국제 환경 여건이 주는 제약은 아주 강했다. 우선 북한은 공산강대국인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우리만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어 한국도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동맹관계로 말미암아 남북한 대결은 동북아 냉전체제에 자동 편입되었다. 즉 남북한 관계를 국제환경에서 떼어 내어 다룰 수 없게 되었다.

냉전시대에는 이념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이웃나라인 소련 및 중국과 접근할 수 없어 고도와 같은 위치에 몰려 있어서 최소한의 협상도 할 수 있는 길을 갖지 못하여 북한과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도 열지 못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제환경이 1989년 이후 일어나고 있는 공산체제의 자기변신에 의해 크게 개선되었다. 소련과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이념의 장벽을 헐기로 선언한 후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북한 관계 개선의 국제적 여건을 크게 향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의 무력통일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보장을 하고 있어 한국은 북한의 무력시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실제로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체결된 朝蘇 우호협력 조약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조항에 대한 개정에 두나라가 합의했다는 로가초프 러시아 외무차관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련과 중국이 미국과 우호관계를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동북아에서 냉전구조는 해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냉전적 국제정치 체제에서 풀려나 남북

5) 강광식(1992), "경제·사회 공동체로의 지향, 교류협력", 「북한」2월호, p.53.

한간의 관계로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 즉 '남북한 갈등의 국내문제화 (koreanization of the inter korean conflict)'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와같은 외부 환경변화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이념적 교조성을 재고할 계기를 주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지속해 오던 한국사회내에서도 '냉전적 대북자세' 즉 이념적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으며 한국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민족내부문제'로 인식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수 있으며 남북한 관계에서 사상적 대결을 배제할 수만 있다면 관계개선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남북한 관계를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닌 상호이익 관계로 개선하여 공존 공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⁶⁾

세계정치의 탈냉전화는 세계도처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볼 수 있게 한다. 전후에 유지되어온 동서 양극적 대립체제가 와해되면서 세계는 구조적 다원화와 함께 탈이데올로기적 국가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냉전체제를 탈피한다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종래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즉 자본주의의대 공산주의의 제로섬 게임 논리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탈냉전 현상은 新和解 과정의 추진이나 '新思考 外交'의 적용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 수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미·소간의 新和解 과정은 세계를 냉전체제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모시켜 놓았다. 이러한 新和解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방면에 걸친 동서 양진영간의 대립과 갈등을 구조적으로나 형태로적으로 해소시켰으며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안보 및 경제질서의 형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고, 정치적 다원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채택을 골간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고 있다. 이로써 유럽은 동서 구별없이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서독의 통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6) 이상우(1990), "이기는 통일에서 함께 사는 통일로", 「통일문제연구」 제8호, pp.143~144.

이런 新和解와 新思考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유럽질서 개편의 촉진은 물론 세계 전역에 걸쳐 개별국가들의 대외정책이나 국가간의 상호작용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북아지역에서도 그러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이 지역이 유럽에 비해 新和解 과정의 정도가 덜하고 아직도 냉전적 구조물들을 상당히 지속시키고 있지만 그 영향은 이미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태들은 '新和解 과정의 한반도화'를 실감나게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2) 社會主義圈의 變化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1989년의 동구권의 자유 혁명은 동서 냉전체제를 일시에 종결시켰다. 전후 냉전은 순전히 스탈린의 공산주의 때문에 생긴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으며 고르바초프의 출현으로 소련에 스탈린주의가 붕괴되자 냉전상태의 원인이 제거된 것이다. 소련의 막강한 무장력으로 지탱해온 동구권의 나라들이 고르바초프의 묵시적 승인아래 민족자결과 민주주의 혁명의 길을 택하였다. 또한 동서 냉전의 실질적 힘이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됨으로써 적어도 유럽에서의 냉전구고는 산산조각이 났다. 소련의 막강한 군사력이 지배한 동구권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혁명적인 대전환을 단행하였고 소련이 존재하는 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소련이라는 세계초강대국이 공산주의 체제로서는 경제적 파멸에 이른다는 자각속에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구조적 대변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반세기만에 일어난 국제 정치의 대변혁을 목도하고 있다. 그러한 대지가 변동은 분명히 1985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우리에게는 이 틈마저 생소했던 新思考를 추진했을 때 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붉은제국"이었던 소련의 심장부에서 그야말로 이러한 新思考를 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소련의 개혁뿐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세계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는 동인이 되었다. 그후 동구유럽 국가들의 체제개혁과, 독일의 통일,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체 등으로 유럽의 지도는 새로운 색깔로 칠해졌으며 이

제 유럽은 새로운 통합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놀랄만한 변혁은 新 思考의 주역인 소련의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3일천하의 쿠데타에서 우리가 목도 했던 소련국민들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그 열정과 바램 그리고 각 공화국들의 자주권 확립등은 러시아 혁명 이후 70여년을 지탱해왔던 사회주의 체제의 소련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대변혁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국제질서에 대한 기본적가정, 고정관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노선에 반대하는 소련 보수파의 쿠데타는 소련에서의 공산당 종말을 가져왔다. 74년간의 공산독재가 붕괴되고 공산당과 비밀경찰이 지배한 소비에트연방조직이 해체되었다.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는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단히 유익한 외적조건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소련의 급속한 접근 및 협력관계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전면붕괴를 뜻하며 국교정상화로 이 지역의 평화증진과 경제기술 협력관계를 추구한다는 사실은 국제관계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벗도 없다는 이치를 실감케해주는 오직 自國이익만 있을뿐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주고 있다.”⁸⁾

남북한 관계를 침해한 갈등으로 대립했던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이념대립이었다. 스탈린주의의 전형을 고수해 오던 북한과 스탈린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해오던 한국 사이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89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스탈린체제는 북한만을 제외하고 모든 공산체제 국가에서 붕괴되었다. 분단 당시에는 스탈린주의가 강한 힘으로 제3세계로 뻗어나가던 때였으며 스탈린주의의 세계적 확장이라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첨병임을 자처하던 북한은 스스로가 조류를 타고 있다고 믿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스탈린주의에 앞장섰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의 이념적 교조성을 막을 도리가 없었으며 한국은 철저한 반스탈린주의 이념 투쟁으로 맞설 수 밖에 없었으며 사회내부에서도 공산주의 동조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사상적 경직성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7) 현인택(1991),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한국 국민윤리학회제주지회 학술세미나(10.5) 발표 논문, p.23참조.

8) 박권상(1991), "평화적 통일을 생각한다."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시아와 평화통일의 전망」, 한국국민윤리학회 제주지회 학술세미나, p.13.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스탈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1985년이래 전개되어온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자기변신적 혁명은 1990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포기선언이라는 극적단계에 이르렀고 이같은 개혁정치는 동구공산권에 파급되어 1989년 이후 거의 모든 동구국가들이 탈공산주의 개혁에 나섰다. 이제 스탈린주의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오직 북한만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⁹⁾

2.北韓의變化와 南北韓關係의 進展

지금 북한이 동구나 구소련과 같이 과감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후계체제 문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대대적인 개방·개혁이 몰고올 체제와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집해온 대남·대외노선이나 입장을 바꾸어 당장에 급진적인 대외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서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철저히 변화를 거부해 왔으며 현재 그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으나 북한의 내외적 상황을 살펴볼 때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권 전반에 걸친 변화와 그로 인한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추세는 북한이 더 이상 고립과 대서방 적대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체제가 '자체붕괴'의 위험성까지 거론되는 정도이다.¹⁰⁾

중국이 개방·개혁을 10여년간 추진해오고 있으면서도 소련·동구식 체제변화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개혁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천안문 사건과 같은 내부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경험은 상당한 참고의 가치가 있다고 인식할 것이며 최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강택민은 「사회주의체제 원칙내에서 경제개혁을 가속화 하겠으며 사회주의도

9) 이상우(1990), 전계서, p.144.

10) 이병희(1990),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민족통일논문」 경상대 통일문제연구소 제 6집, pp.120~124.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하고, 최고지도자 등소평은 「개혁만이 중국의 살길이며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물러나야 한다. 개혁없는 곳에는 막다른길이 있을 뿐이며 자본주의의 요소들을 과감히 수용해야 하며 深圳의 발전과 경험은 우리의 경제투자정책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북한은 예의주시하여 중국측으로부터 ‘체제 고수’라는 기본전제와 ‘체제변화’라는 불가피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저 시도할 것이다.

사실상 북한은 정치방면에서 특기할만한 개혁정치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이 처해있는 입장은 2중성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기본적인 대남노선이나 국가 정책기조를 갑자기 바꿨다가는 체제가 위협하다는 인식아래 기존의 노선과 기조는 유지하되 그 안에서의 정책적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비록 미미하나마 경제적 측면에서 변화의 조짐이 있어 왔다. 예컨대, 독립채산제, 능력별 임금제도, 개인 부업의 일부허용, 도시지역 상설 자유시장의 부분적허용 등 조치를 취했다.¹¹⁾

더구나 최근 북한은 대외경제 협력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 구상의 활발한 논의와 함께 두만강 하구 유역의 개발계획에 관한 북한의 정책이 새로운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즉 함경북도 선봉군일대를 ‘경제무역지대’ 즉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추진 움직임과 대내개혁의 미진함은 북한이 개혁보다는 개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북한이 개혁보다는 개방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로서 경제적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대외개방을 통해 서구의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어 단기간내에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있어서 최근 개방조짐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부적 필요성 보다는 외부적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개방우선정책을

11) 전성홍(1991), “북한체제변화에 있어서 중국모델 수용고찰,” 「북한」 11월호 p.123.

취하는 배경에는 경제외적 요인이 더욱 근본적인 것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의 추세를 통해 볼 때, 북한은 개혁의 추진보다는 경제특구 정책을 통한 대외개방에 역점을 두는 특징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개혁을 거부하고자 하는 기본성향과 개혁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적 조건이 상호 상충되어 심각한 모순과 갈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기본체제를 고수하는 전제 하에 필요한 한에 있어서 최소한의 부분적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금 소연방 해체와 동구권의 개혁등이 가져온 외교적 고립과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하고,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해야 하며, 김정일세의 권력세습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핵무기 개발 촉진에 대한 국제적압력을 모면하고, 대미·대일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등장한 핵사찰문제의 해결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¹²⁾

북한은 이제 일본과 미국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하는 궁지에 처해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해서 대남관계도 재조정을 꾀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당국자들 역시 현존하는 권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경제개혁을 꾀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싫든좋든 달쳐있는 사회를 일부나마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금에와 북한사회 내부에는 '우리식대로 살자'는 혁명주의적 노선의 강조속에서도 현실주의적 실용주의 노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조짐이 하나씩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의 신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철회라는 형식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예고하는 이른바 현실지향적 정책변화들

12) 「조선일보」, “핵사찰과 남북관계 재조명”, 1992.4.6.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한다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개방, 사회·심리적 개방, 혹은 정치적 개방을 의미한다.

보이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과거 20여년간은 「북에 의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혁명 달성이나」, 아니면 「남북이 상호존재를 인정하고 평화적 공존관계로 전환하느냐」의 투쟁과 갈등으로 점철돼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³⁾

즉 분단 40여년의 남북한 관계는 극심한 이념의 대립과 전쟁 및 군사력 경쟁 그리고 긴장으로 이어지는 비생산적이고 적대적 관계로 점철되어 왔다.¹⁴⁾ 그러나 지난해부터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40여년간 얼어 붙었던 남북한 관계에 봄기운이 돌고 있다. 지난해에는 남북한 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해였다.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평화지향적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일성집단조차 남북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밖으로 일본·미국등과 접근하는 등 문호를 개방하고 안으로 한국과의 접촉, 체육·문화의 교류뿐만 아니라 총리회담 등 정치회담을 열고 있다. Prisoners' Dilemma game에서 보는 '상호협력형'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증후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갈수록 사회주의 체제의 생존문제가 더욱 절박한 과제로 대두되어 작년 북한의 김일성은 일본의원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도 지구상의 한 나라이므로 세계움직임에 맞추어 나가겠다.」는 현실노선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간 국제사회에게 주체사상이라는 허울로 고립노선을 추종하던 북한이 소련-동구의 개방-개혁사조를 용인하고 북한의 경제과탄을 모면하기 위한 정책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들어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수락하고 연이어 연말에 가서는 핵무기개발 포기의 뜻을 밝히는 「비핵화 공동선언」에 동의하고 나섰고 1992년 1월 30일 IAEA와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였다.

13) 김달술(1988), "남북대화의 평가와 남북관계의 재정립," 「통일연구논총」 8권1호, 통권 34호, 국토통일원, p.63.

14) 박하일(1988), "분단 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의 재조명," 「민족재결합의 모색」 제38집, p.6.

핵무기포기 약속이 북한의 진정이고 실현된다면 남북관계는 앞으로 전혀 새로운 양태로 발전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화해의 수용자세 표시라고 한다면 이제 남북한은 화해, 공존, 공영의 새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핵없는 한반도」의 장래는 우선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공존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와 「공동선언」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를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란 특별한 유대의식속에서 공존공영을 추구해 나가는 새 시대를 맞게 될 것이 틀림없다.

1992년을 고비로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을 버리고 평화공존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북한의 체제수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는 북한의 체제를 손상시키지 않는 「평화공존의 틀」속에서 경제난해결, 국제적 고립탈피, 순조로운 권력승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화해조짐은 김일성이 자신의 후계자인 김정일에게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물려준 뒤 남한과의 관계정상화추진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구슬러 보려는 그의 우호계획은 오로지 김정일에게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해주고 스무드한 김정일의 안전세습을 포석으로 하여 주민들의 사상결속으로 당면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점도 있지만, 공산권의 대부분 국가들이 국제환경에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만이 홀로서기로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소련이나 동유럽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적 대조류의 예외로 남아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결국은 변화하고 말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남북한 관계는 더많은 커다란 진전이 있게 될 것이며, 통일의 기반은 착실히 조성될 것이다.¹⁵⁾

즉 남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높여가야할 시점에 와 있다. 북한은 러시아연방과의 관계를 아직도 이념적인 유대감이나 군사적 동맹국이었다는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적 관계에 입각한 현실주의적 노선에서 재정립함으로써 북한의 위상과 역할을 증대시킬

15) 김학준 외(1991), 「민주화로 가는 길」, 도서출판 다나, pp.46~47.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이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필요때문에 미국에 협조적 동반자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면서 통일을 성취시켜야 할 것이다. 항시 가변적인 국제정세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미·러 불평등 동반시대는 통일의 호기임을 알고 한민족의 역량을 스스로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¹⁶⁾

그러나 우리에게도 분명하고 희망적인 사실들이 있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대단히 느리고 우여 곡절이 있긴 했으나 그 방향은 개방과 화해의 길을 꾸준히 걸어 왔다는 점이다. 한때 피비린내나는 동족상잔을 겪었던 남북이었지만 UN동시가입이 이루어졌고, 남북간의 교역액이 2억 달러를 넘었으며, 극히 제한적인 의미밖에 없었지만 이산가족 고향 방문에 이어 남북 단일팀(탁구, 축구)까지 구성한 경험도 있다. 이제 남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의 지침이 될 '합의서'까지 채택되었다.

1992년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는 예년과 같이 도전적이고 강령적인 주의, 주장들과는 달리 남북한 UN동시 가입과 합의서 채택에 따르는 화해의 흐름을 반영하였는가 하면 현실 인정을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려는 징조마저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한반도의 비핵 평화지대화'를 다짐한 것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남북 관계개선을 기대해 볼만한 희망적 변화로 평가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새로운 남북한 관계는 「대결구조」가 아닌 「화해협력구조」로 전환되고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¹⁷⁾ 특히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어우러진 남포 합작 공장의 사업은 남북 경제교류의 시금석으로서, 또 더 나아가 민족공동체의 꿈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제 남과 북은 경제활동을 통한 통일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남북 경제간 보완성을 회복, 민족경제의 이질화를 해소 시켜나가 민족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라 평가할 수 있다.

16) 박경서(1991), "미소 불평등 시대와 한반도 정세", 「외교」 제20호, pp.11~13 요약.

17) 김달술(1988), 전계서, p.99.

그리고 오늘날 한반도 관련 강대국들이 국내문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한반도 통일문제의 해결에도 그만큼 남북한 역량의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크게 보아 새로운 남북한 관계는 대립관계에서 공존관계로 옮겨져 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3. 統一意識의 變化

민족 그 자체는 불변이고 불멸이지만 그 구성원은 세월이 가면 바뀐다. 1945년 한 민족사회가 강제분단을 당하던 때의 민족구성원과는 달리 이제는 남북한 동포간에 함께 살아 본적도, 그리고 접촉해 본적도 없는 새로운 민족구성원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함께 이루어 살다 헤어진 동포들간의 통일열망과, 책을 통해 동포라는 사실을 배운 새 세대의 민족사회 구성원들간의 통일열망이 같을 수 없다. 이제 감정을 앞세워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무조건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주장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토대로 합리적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지는 시대에 이르고 있다.

민족분단자체가 냉전체제의 부산물이기도 하였지만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냉전시대에 우리의 남북관계는 민족내의 두 집단간의 갈등관계라기보다는 전세계적 냉전체제에 편입된 국제갈등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극복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그 냉전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우리를 제약하던 국제정치의 구조적 멍에가 사라졌다.¹⁸⁾

남북한 갈등의 핵심을 사상투쟁이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주창하는 스탈린주의와 사회구성원 모두간의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의 대결이 그 핵심이었다. 상극하는 이념을 앞세우는 한 남북한 두체제는 극한적인 투쟁이외의 관계를 설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스스로 사상적 자기변신을

18) 이상우(1990), 전제서, p.134.

선언하고 나섰다. 이제 통일의 길목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이던 사상적 장벽이 국제사회에서는 무너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통일환경과 여건은 그 어느때보다도 좋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에 비해서 매우 좋아졌고 '70년대에 비하여 보면 훨씬 좋아졌다. 물론 분단 직후보다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상 분단직후부터 6·25전쟁 이전까지는 지금보다 통일이 쉬운 상황이었지만 6·25전쟁 후에는 통일의 제반여건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통일의 환경과 여건은 점차 개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분단의 세월이 어느덧 40여년에 이르다보니 우리 사회안에는 통일은 어려운 문제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또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평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늘어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통해 보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비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이룩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국토통일원에서 1983년, 1984년, 2년에 걸쳐 대학생, 청소년등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94%가 '통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사람은 4%, '모르겠다.'는 사람은 2%에 불과했다. 한편,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62%인데 반해,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30%나 되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8%나 되었다.¹⁹⁾ 이러한 반응을 보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비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통일 문제를 어려운 문제로 여기게 된다는 나름대로 몇가지의 논거가 있다.

첫째, 우리가 아무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상대인 북한 공산집단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또는 남한 내부의 폭력혁명 방식에 의해서 한반도의

19) 이세기(1985), "통일의 전망과 우리의 자세," 「통일논총」, 5권1호, 국토통일원, pp.243~244.

공산화노선을 고수하면서 호전성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통일노력은 공허한 주장이 될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평화통일은 결국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설사 우리의 통일노력을 역이용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나마 대화, 교류, 협력에 응한다 하더라도, 분단 40여년동안의 심각한 민족이질화 현상으로 인하여 교류, 협력 등의 방식에 의한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이 어렵게 되어있는 상황이므로, 결국 내면적·정신적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는 논지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하는 것이다. 이것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건 무력적인 방법에 의해서건 민족의 재통일은 어차피 틀렸다고 보는 생각이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統一無用論의 논거로 될 가능성도 있는 생각이다.

셋째, 한반도의 분단자체가 강대국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한반도 분단상황을 전제로 하여 그들의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한반도가 통일되려고 할때 이를 허용하겠는가? 즉 주변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정착, 남북한간의 평화적 공존까지는 지지하거나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권력정치를 본질로 하는 국제정치의 속성으로 볼때 궁극적인 통일까지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지로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넷째, 역사적으로 볼때 모든 통일은 무력통일이었을 뿐 평화통일 사례는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도 결국 평화적 방법으로는 어렵고 필경 무력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논지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회의하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 경제성장에 주력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남북분단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국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개인욕구 위주의 목표추구에 몰두하는 나머지, 통일의지를 소홀히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생활 수준은 질량면에서 매우 향상되었으며 현대기계문명의 혜택으로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60년대가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GNP시대」라고 한다면 '70년대 이후는 물질적 충족을 넘어서 정신적 충족과 인간적가치를 추구하는 「말

GNP시대」라고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은 GNP의 상승과 함께 생활에서 정서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정신생활의 측면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성취에 최선을 경주하였다.

그러한 의식과 생활구조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개인 목표 성취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현실에 만족할 뿐 국민의식이나 국가의 지상 목표가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무관심한 심리상태를 가지게 하였다. 결국 국민생활의 현상유지를 위해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불원하였으며 그러기에 통일에 대한 의식형성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적 국민의식은 개인목표의 성취와 통일의식의 확립문제와를 상호보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호 분리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1987년 이래 활성화되기 시작한 통일논의가 확산되어 가면서 통일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 냉전 이데올로기 논리로서 사회주의 체제를 적대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개방과 상호교류의 관점에서 다양한 관계개선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문호개방, 정보교환, 자유왕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적대감, 경쟁심이 크게 완화되고 민족적 동질의식이 내면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분단이후 세대인 젊은 세대에서 이데올로기의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민족적 동질의식이 높다는 점은 통일의식 변화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¹⁾

특히 독일 통일은 우리의 통일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무력통일이 아닌

20) 한영춘(1985), "향후 10년,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전망," 「통일논총」 제5권 1호 국토통일원, pp.9~10.

21) 장하진(1991), "통일의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의 비판적인식」, 나남출판사, pp.432~433.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통일독일의 탄생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분단국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가 독일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밟을 수는 없지만 독일통일에 대한 분석은 우리의 통일의식 변화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동서독이 통일된 국가로 통합되기까지는 동·서독 각자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는 평화공존의 단계를 거쳤다는 사실이다. 동서독이 서로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체제이기에 국가통합을 우선시한다면 통일로의 길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산가족 재회,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여 동서독의 분단이 가져온 고통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 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합의를 이루어 통합해 가는 「작은 걸음의 통합」을 누적시켜 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독일의 통일에의 노력은 유럽에서 형성되어 가는 새 질서구축과의 조화를 이루어 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이 유럽의 국제정치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되어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독일이 통일되므로 유럽의 국제질서속에서 불리한 지위로 밀려나갈 강대국이 생긴다면 그 강대국은 결코 독일의 통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독일의 통일노력은 강대국 간에 조성된 새질서에 큰 변화를 주지 않도록 전개되어 왔다는 점이다.²²⁾

우리 사회는 통일이라는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민족적인 당위성을 감상적으로 강조하거나 아니면 역사적 비관론에 젖어 있었다. 더욱이 오늘날까지 남북한 관계를 규정해온 6·25전쟁과 그 산물로서의 휴전(협정)을 현실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이 사회에서 점차로 퇴장하고, 전후세대 혹은 전후 제2세대가 사회에 참여하면서 북한에 대한 사회적 태도나 통일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다.²³⁾

22) 고성준(1991), "독일의 통일과 북한의 변화 그리고 민족통일,"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제2집, pp.170~171.

23) 이기택(1991), 「한반도통일과 국제정치」, 도서출판 삼영, p.15.

분단 이후 출생한 인구가 전체인구의 3분의2를 넘어서서 4분의3에 육박하고 있다. 통일열망의 근거는 분단고통의 해소와 남북한 국민간의 동포의식의 두가지로 압축된다. 분단 고통의 해소라는 영역에서 가장 강한 욕구는 이산가족 재결합이고 그 다음이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다. 동포의식은 통일의 당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의 근거다. 함께 민족사회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우리 意識'이 통일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만일 남북한 주민간에 이러한 동포의식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통일이란 처음부터 원인무효가 되는 셈이다.

분단 45년이 지난 현재, 이산가족의 아픔을 느끼는 민족구성원의 수가 많지 않다. 인구의 10%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간의 '우리 意識'은 지속적 교육에 의하여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이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하며 민족 사회 발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남북한 주민의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라는 생각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동포의식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가슴보다는 머리로 느끼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통일의식은 이성적 판단과 합리성을 전제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現行 中等學校 統一教育의 現況과 問題點

1. 統一教育의 目標과 內容

1) 統一教育의 目標

제5차 교육과정 중학교 도덕과·고등학교 국민윤리과 교과목표중 통일·안보 영역의 목표를 보면 “국토 분단의 비극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깨달아,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실상과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 “조국통일의 당위성과 제반문제를 이해하고 북한 공산체제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민주 평화 통일의 실현을 위한 신념을 가지게 한다”라고 각각 진술하고 있다.²⁴⁾

이는 통일안보영역에서 지금까지의 감정 형성 위주의 교육, 지나친 흑백논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공산주의 이념이 갖는 허구성과 비현실성, 그리고 북한공산집단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우리사회와 비교해 봄으로써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이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국토분단에 따른 민족의 현실적 상황을 통해 민족사적 정통성을 가진 우리의 민주체제로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근거의 정당성을 이해시킴으로서 조국통일의 의지를 가꾸어 가도록 하였다.²⁵⁾

또한 통일안보교육은 모든 이념이나 북한실상 교육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그들이 통일에 대하여 진지한 합리적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되(통일의 측면), 우리의 체제, 생존 그리고 통일

24) 문교부(1988),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p.145.

문교부(1989), 고등학교 국민윤리과 교육과정 해설, p.136.

25) 문교부(1988), 상계서, p.150.

의 위협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추도록(안보의 측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⁶⁾

(1) 中學校 統一教育의 目標

통일교육의 교과목표를 보면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북한공산집단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이바지 하게 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토분단의 비극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깨달아,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며, 북한 공산집단의 실상과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로 서술되어 있다.²⁷⁾ 또한 학년별 목표를 살펴보면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국토분단의 비극, 북한공산 집단의 만행과 북한의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우리 민주체제의 우월성을 깨닫게 한다”, “공산사회의 현실을 알고 민주체제의 우월성을 깨달아, 공산주의의 도전을 분쇄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 “북한공산집단의 적화야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을 바르게 인식하여,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로 각각 학년별로 서술되어 있으며²⁸⁾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토분단의 비극 및 북한 공산집단의 도발과 북한의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여,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깨닫고,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을 가지게 한다.”,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의 현실문제를 깨닫고,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공산주의의 본질과 공산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민주사회의 우월성을 깨달아,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로 각각 제시되어 있다.²⁹⁾

26) 문교부(1989), 상계서, p.146.

27) 문교부(1981), 중학교 교육과정, p.10.

문교부(1987), 중학교 교육과정, pp.12~13.

28) 문교부(1981), 상계서, pp.11~13.

29) 문교부(1987), 상계서, pp.12~18.

(2) 高等學校 統一教育의 目標

통일교육의 교과목표를 보면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을 굳게 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조국 통일의 당위성과 제반문제를 이해하고, 북한 공산체제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민주 평화통일의 신념을 가지게 한다.”로 서술되어 있다.³⁰⁾ 이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민주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여 북한공산체제에 대한 객관적 실상 파악에 강조점을 두었다. 즉 획일적인 반공교육의 입장에서 탈피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능력을 토대로 반공신념과 통일의지를 균형있게 가지게 하려고 하였으며, 조국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갖도록 하였다.

2) 統一教育의 內容

30년 이상 이 땅을 지배해 온 통일 교육은 역사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점차로 교육 내용도 변화되어 갔다.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국교를 맺어 가게 되자, 80년대 이후 제4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우리의 통일 교육은 종전의 승공·멸공 통일 교육관보다 진일보한 우월주의 통일 교육관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상대와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승리를 통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재의 내용구성과 방법에서 체제 우위를 강조하였고, 북한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내지 증오심의 유발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귀결되게 짜여져 있었다. 다만 이 때부터 통일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남북 대화), 통일의 미래상, 통일의 정당성과 의지 등을 다루는 통일에 관련된 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전체적으로 내용·방법 면에 있어서 종전의 것들을 답습하면서도, 통일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다 현실적(당시의 현실)으로 접근하고 있다.

30) 문교부(1989), 전계서, p.149.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 구조의 와해와 함께 국내에서도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마침내 1989년부터 시작된 제5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 인식이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시각이 변하고 있다. 즉 통일 지향적 교육관으로의 전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전의 적대감 내지 증오심 유발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화합과 동질성 회복'의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 표현상의 정서적인 면과 학습 방법면에 있어서도 중전의 단선식 결론 제시를 지양하고, 학생의 사고력과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공산당의 도발 행위라든가 적화 야욕에 대한 언급 또한 상당히 자제되고 걸러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의 제5차 교육과정은 민주적 평화통일의 의지를 구체화한 최초의 것이 되었다³¹⁾고 한다. 즉 현행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안보 교육은 종래의 반공 교육에 대한 발전적 개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³²⁾ 여기서 '반공 교육의 발전적 개선'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주목해 볼때 여전히 통일·안보 교육은 반공 교육을 그 바탕에 깔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1) 中學校 統一教育의 內容

통일교육의 내용을 보면³³⁾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서 북한의 현실을 알아 보게 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토분단의 원인과 교훈, 북한 공산집단의 정치현실, 북한의 경제적 현실, 북한의 사회·문화 현실을 다루었으나,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토분단의 현실을 알아보게 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토분단의 원인과 이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주 국방의 의지를 북돋아 가게함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분야별로 살펴봄으로써 과연 어느 체제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체

31) 윤성한(1990), "성공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위한 제언", 「새교육」, 7월호, pp.98~99.

32) 문교부(1989), 「통일안보 교육지도자료」, 장학자료 제60호, pp.9~10.

33) 문교부(1981), 전계서, pp.11~14.

문교부(1988), 전계서, pp.173~181.

제이고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체제는 어느 체제인가를 학생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하여 지금까지의 감정 형성 위주의 반공 교육에서 탈피하여 공산주의를 알고, 그 압을 통해 공산주의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학년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공산사회의 현실을 중심으로 공산사회의 특성, 공산국가의 침략정책, 공산국가의 침략사례와 그 교훈, 공산권의 분열이 주내용이 있으나,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절실한 소망인 동시에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야 할 과제는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의 당위성에서는 막연히 심정적으로 통일의 소망을 갖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분단된지 40여년이 넘었음에도, 또 통일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일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통일에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세들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다.

3학년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통한 통일의 염원과 통일의 의미,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북한 공산집단의 적화야욕, 민주적 평화통일과 우리의 자세 등을 다루었으나,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고 공산권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상황을 제시하고, 공산집단의 침략성과 도전성이 공산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공산권내의 문제로 야기되는 공산권의 분열과 자유화운동을 지적하여 민주사회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高等學校 統一教育의 內容

통일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조국수호와 평화통일을 중심으로 하여 공산주의의 이론과 현실, 국제정세와 한반도, 북한사회의 특성, 북한공산집단의 침략정책, 우리의 통일정책, 국가안보와 우리의 사명을 주로 다루었으나,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토분단의 과정, 정통성의 문제, 북한공산체제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는 아무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민족중흥과 세계평화를 위한 우리

의 지상과제라 할지라도 통일은 감정적 기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타의에 의한 분단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대한 민국의 정통성과 북한의 통일정책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통일의 의지와 안보의 의식을 균형있게 키워가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분단된 국토의 통일은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공산집단은 공산권 세계에서조차도 이단시될 정도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독특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⁴⁾

2. 統一 教育의 方法

도덕과·국민윤리과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법에 대해서 현행 교육과정은 별로 의미있는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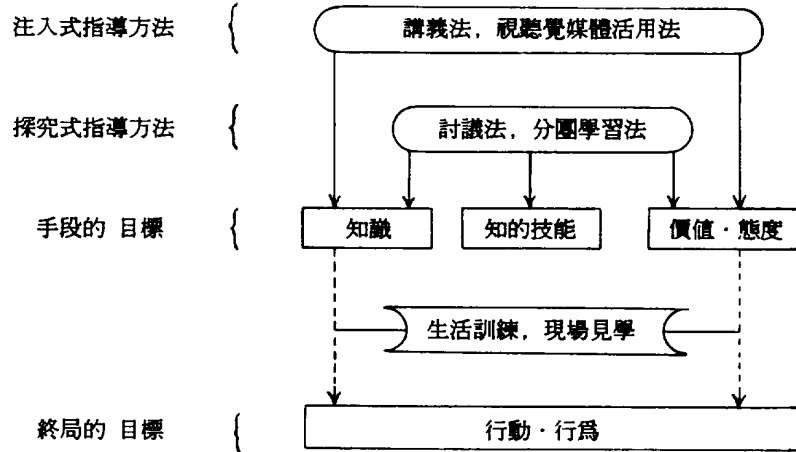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자료활용이 지적되고 있으나, 실제 수업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로는 불충분하다. 수단적 목표 및 종국적 목표와 관련지어 도덕과·국민윤리과 지도방법 모형을 제시하여 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의 방법모형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도덕과·국민윤리과 교육의 수업목표에 해당되는 수단적 목표인 지식, 지적기능, 가치·태도를 습득케 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주입식 지도방법과 탐구식 지도방법의 두 종류가 있다. 주입식 방법은 교수자 중심의 방법이고, 탐구식 방법은 학습자 중심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각 방법에 속하는 기법(technique)을 보면 전자에 속하는 주기법은 강의법이고 탐구식 지도방법에 속하는 주기법은 토의법이고, 부기법은 분단학습법이다.³⁵⁾

34) 문교부(1989), 전계서, pp.167~174.

35) 정세구의(1984), 「도덕과 국민윤리과 지도법」, 교육과학사, pp.26~27.

그림1. 指導方法 模型



자료 : 정세구의 (1984), 「도덕과·국민윤리과 지도법」, 교육과학사, p.26.

1) 注入式 指導方法

주입식 지도방법은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교수활동을 펼치는 것을 뜻하며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기회는 거의 제한되어 있는 교수학습법이다. 즉 교수자 중심의 교수·학습 과정이다.

주입식 지도방법의 범주에 속하는 기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여건에서 국민정신 교육의 기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대표적인 講義法이 있다.³⁶⁾ 이 기법은 교수자의 구두에 의한 강화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모든 기법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서적의 공급이나 해독이 매우 제한되었던 시대에는 이 교육방법이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교재의 공급이 원활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수자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존하려는 이 기법은 최근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36) 정세구 (1983), 「국민윤리교육론」 교육과학사, pp.123~124.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기법은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기법의 가장 큰 비판은 그 효과와 관련되는 것이다. 우선 강의법이 학생들을 수동적인 위치에 두기 때문에 학습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적 기능의 신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가 단 시간내에 학생들의 수용능력을 무시한채 지나칠 정도의 교육내용을 주입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교육자들이 교육내용을 소화하지 못하며, 또 그 소화여부가 밝혀지지 않은채 수업이 진행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단점은 이 기법이 잘못 사용될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제대로 사용될 경우 많은 장점 또한 발견할 수가 있다. 이 기법의 장점을 지적하여 보면,

첫째, 교수자의 화술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실제 경험한 내용을 생생하게 들려 줄 수도 있어 인쇄된 서적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때에는 즉각적으로 되풀이하여 설명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으며 짧은 시간내에 많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다. 주입식 지도법은 지식이 구두통신의 형태에 의하여 학습자의 시각에 도달하게 하거나 인쇄된 활자나 그림의 형태에 의하여 학습과 시각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즉 외부적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신경계내에서 변형과정을 거쳐 기억되었다가 나중에 새로이 재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방법상의 강조점은 일단 습득한 지식을 오랫동안 기억과 파지를 하게 되는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회상할 수 있게 지식내용을 조직하여야 하고 또 반복되는 자극을 주어야 한다.

2) 探究式 指導方法

탐구식 지도방법은 앞에서 고찰한 주입식 지도방법과 대조되는 것으로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교수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사실과 가치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입증하는 등의 반성적 사고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 중심의 지도방법이며 교수자의 역할은 탐구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조정자로서의 수동적인 것이다. 탐구식 지도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알맞는 기법으로는 토의법과 분담학습법이 있다.

(1) 討議法

이 기법은 학습자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공동의 문제에 대한 집단사고와 대화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유와 협동을 존중하는 기법중의 하나이며, 교사의 인도에 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집단사고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나 결론을 도출케 하는 탐구식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다.

이 기법은 강의법과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민주적 발전과정에서 집단속에서의 중요한 결정이 한두 사람의 의사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간의 대화와 논의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³⁷⁾

토의법의 장단점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으나, 장점으로는 토의법의 배경을 이루는 심리과정에서 지적능력의 신장, 외적보상으로 부터 내적보상으로의 변화, 기억의 유지등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토의법의 기초를 이루는 발견이나 문제해결이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교육 여건상 실제로 아직은 강의식 방법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나 주입식, 강의식 방법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과 그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토의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지식을 듣는것만으로는 가치관의 내면화도 지적기능의 신장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토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가치판단을 내리고 여러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열심히 확인(affirming)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가능해 질 수 있다.³⁸⁾

37) 정세구의(1984), 전개서, p.29.

38) 정세구(1989), "이념적 혼란기 극복을 위한 이념교육의 방향", 「이념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문교부, p.20.

토의법의 유형으로는³⁹⁾ 첫째, 패널 토의(panel)이다. 이 토의는 학생중에서 소수의 집단 즉 4~8명 정도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지닌자가 선발되어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한 문제에 대한 토의를 벌리는 것이다. 그들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자유롭게 의사 발표를 한다. 토의가 끝난후 교사는 의견을 조정하기도 하고 결론 내리는 것을 돕기도 한다.

둘째, 대립토의(debate)이다. 토의를 진행해가는 교사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대립되는 의견에 따라 두 집단을 갈라놓고 서로 자유롭게 토의를 벌리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의 참여자의 수를 제한할 수도 있고 대표가 의견을 모아 발표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토의의 문제를 미리 정하여 준비를 시킨후 토의할 수도 있고 즉흥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셋째, 포럼 토의(forum)를 들 수 있다. 이 토의는 한 학생이나 몇 학생이 전체 앞에서 발표를 한 후 청중속에서 몇사람이 나와 토의를 벌린다. 이때 교사는 이 토의를 이끌어야 한다.

넷째, 심포지움(symposium)이다. 이는 수명의 발표자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의견을 순서적으로 발표한 후 다른 학생들로 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한다. 발표자는 발표자료를 배부할 수 있고 교사는 순서적인 발표와 질문응답을 도와준다.

(2) 分團學習法

이 기법은 학생들을 분단별로 나눈후 과제를 주어 해결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법은 학습자들의 경쟁적 심리와 서로 협동하는 태도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이것은 공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법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새로운 사태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문제나 곤란을 과거의 경험과 창조적 사고 과정을 거쳐 해결하려는 것이다.

분단학습의 절차는 먼저 교사가 주제를 설정, 발표한 후 어떤 연구내지 학습자료가 그 주제에 필요한가를 지적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주제의 수에 따라 여러개의 분

39) 정세구(1983), 전제서, pp.133~134.

단으로 나눈다. 각 분단은 그 분단을 이끌어 갈 분단장과 분단기록자를 임명하게 한다. 각 분단은 문제의 제기, 가설의 설정, 탐색, 증거제시, 결론 도출등의 일반적 탐구 혹은 문제 해결의 절차에 따라 각 분단에 맡겨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법이다.

3. 統一教育의 問題點

분단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남북한에서 시도되어 온 통일 교육의 실상을 살펴보면,

제 1기('45년~'50년대 초)는 남북한이 각기 민주적 민족 교육과 공산주의 모방기로 분류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면에서는 각기 제시된 이념에 비해 내용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일종의 교육준비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제 2기('50년~'60년대 초)는 우리의 민주 시민 교육과 북한의 계급 교양이 강조, 대립되는 시기이다. 우리는 도의 교육, 도덕 교육을 국정 교과서로 지정하여 반공 교육을 강화한 때이며 북한은 계급 교양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한 때이다.

제 3기('60년~'70년대 초)는 우리가 민주 교육에서 민족주의 교육으로 전환한 시기로서 민족 주체성과 국력 배양을 강조하였고, 북한은 혁명 전통 교양과 유일사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주체' 확립을 시도하였다.

제 4기('70년~'79년)는 국민 윤리 교육이 강조되는 등 우리의 민족주의 교육이 더욱 체계화된 시기이며, 남북 대화를 추진하면서 통일 안보 교육 지침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신격화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교육 테제'를 발표하였다.

제 5기('80년~'87년)는 우리가 국민정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을 강조한 반면에, 북한은 권력 세습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 때이다.

제 6기('88년~현재)는 우리가 통일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하여 제 5차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기존의 수세적 통일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경주함에 비하여, 북한은 김정일 이상화 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세습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⁴⁰⁾

요컨대, 남북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단 이후 공히 냉전 논리와 대결 논리에 입각한 상호불신과 부정, 공격 일변도의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남한은 자유, 민주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북한은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상호대립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므로 종전의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냉철한 비판적 성찰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중등 통일교육은 분단 이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리 변화하여 왔으나 해방이후부터 1980년 중반까지의 반공교육과 그 이후의 통일안보교육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교육방침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반공으로 일관해 왔으며 이러한 반공의 기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강도를 달리하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반공교육은 남북분단과 6·25전쟁 이후의 국민결속과 정권유지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과거 반공교육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⁴¹⁾

첫째, 국민들의 반공교육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여 시대변화에 맞게 적절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둘째, 반공교육에서 대북경제십과 통일의지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셋째, 북한과 공산권국가 그리고 공산주의의 변화양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넷째, 너무 현실문제에 집착한 결과 과정상의 문제를 소홀히 하였으며, 북한의 실

40) 서울특별시 초·중등교과교육연구회편(1991), "남북한교육내용비교분석", p.27.

41) 백종억(1992),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 방향탐색,"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통권 제13호, 통일원, pp.197~198.

체를 도외시키고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였다는 점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통일논의가 다양화되고 반공의 시대적·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됨에 따라 반공교육의 개선요구가 크게 증대되었다. 따라서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더불어 통일의지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국민정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6년부터 '반공교육'이라는 용어를 '통일안보교육'으로 대체하고 제5차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학교 교육에서 통일 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반공 교육, 멸공 교육, 승공 교육, 통일·안보교육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일 관련 교육이 실시되면서 분단 고착화로 혹은 지나치게 안보 논리 차원으로 흐르지 않았느냐는 비판과 함께 나아가, 통일 교육이 명확한 교육학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정책상의 고려에 의해, 혹은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political selectivity)에 의해 실시됨으로써, 이론적 체계나 교육 내용 및 방법상의 일관된 틀을 지니지 못한 채 그때 그때의 정치적 목표 구현에 동원되는 우물쭈물해 온 것이 사실이다⁴²⁾는 지적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목적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 계획하에서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해력을 원리적이고 이론적 수준에서 배양하여, 통일을 성취하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장차 통일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에 책임있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⁴³⁾고 할 때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 통일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중등학교 통일 교육의 주요 내용은 민족 분단, 북한의 현실, 국방안보, 통일 및 이념의 문제의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 다섯 가지 내용은 독자적으로 그 세부 내용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내용들이 어떤 일정한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취급되고 있으므로 인해 단순히 남북 비교의 이분법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

42) 추병완(1992),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새교육」, 6월호, p.172.

43) 신상조(1992),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교육월보」, 3월호, p.42.

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⁴⁴⁾

통일교육은 통일조국의 성취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통일실천역량을 길러 주고 통일 및 남북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 교육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통일 교육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타당한 교육내용의 선정·배열 그리고 학습방법 등의 각 국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이러한 시각에서 종래의 통일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교육의 패러다임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일 교육의 명확한 지침이나 계획, 통일 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도 방법, 평가, 그리고 통일 교육의 지원 관리체제 등이 일관되게 실시되지 못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는 임기응변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통일원이 선정한 통일 교육의 목표가 있어 왔지만, 통일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교육, 또는 통일에 대비한 목표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통일 이후를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즉 국토통일원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통일방안이 있어 왔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⁴⁶⁾ 그 속에서 통일의 원칙에 해당하는 민족자결, 민주, 평화나 자주, 평화, 민주가 올바른 통일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이 정부주도로 결정되는 한 정부의 통일 정책홍보의 인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통일교육의 목표로서 제시하기에는 어느 정도

44) 김태완(199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교육월보」, 1월호, pp.42~43.

45) 최인화(1991), “현행 통일안보교육의 현주소와 전개방향”, 「새교육」, 1월호, pp.49~58.

46) 한국교육개발원(1992), 「중학교 도덕 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p.237~243.
서울대학교 국민윤리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1992), 「고등학교 국민윤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p.285~288.

한계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통일 교육의 주된 내용은 우리의 통일 정책, 안보문제, 북한의 실상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북통일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민족화합, 민족동질성 회복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능력의 신장기회 배려는 물론, 통일 이후의 제문제에 대비하는 통일 교육이 교육과정상 배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정책 자문회의에서도 최근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멸공 또는 승공을 전제로 한 반공교육의 일부로 취급되어 온 면이 많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⁴⁷⁾

- ① 남북한 이데올로기의 절충 또는 상호양보를 완전 배제하고 있음
- ②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의식을 특히 강조한 반면에 통일에 대한 상상력·논의방식·절차·통일방안의 평가안목 등을 소홀히 취급함
- ③ 통일이후의 시기에 대비한 교육이 경시됨. 예컨대 통일 이후의 정치·경제·사회·교육체제의 혼란과 재정립과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국민적 준비에 대한 배려가 없음.
- ④ 통일교육은 민주 시민적자질 육성을 통해 통일 실천역량을 증대하고 통일이후 민족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 관건을 두어야 함에도 이제까지 그러하지 못하였음 등이다.

그러므로 한민족 공동체의 이념과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이 밀도있게 유기적으로 학습되는 기회가 거의 배제된 채⁴⁸⁾ 통일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나아가 민족동질성 회복의 중요성만 맹목적으로 부각시키는 폐쇄적인 성격을 띠어 온 것이다. 이렇듯 통일에 대한 합리적 사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일 문제의 적극적

47) 교육정책자문회의(1990),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정책자문보고 제11호, pp.4~7참조.

48) 최인화(1989), "민족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통일 교육의 전개 방향", 「교원 교육」, 제5권 제1호, p.159.

참여를 위한 민주 사회적 기능들이 도외시된 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호소하려는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게함으로써 오히려 참다운 민족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장애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통일 교육 내용이 주로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어 학년의 거의 끝나갈 무렵에나 다루어지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학습평가가 종료되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것에만 민감해져 있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통일 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남북 분단의 국제적인 요인은 강대국의 한반도 점령 정책으로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약소국의 패배 의식을 인정하는 등 민족의 자주적인 자세를 갖게 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테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경우, 남북 분단의 국제적 요인 및 국내적 요인⁴⁹⁾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남북 분단이 강대국의 한반도 점령정책으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오히려 민족의 자주적인 자세를 갖게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분단의 국내적인 요인으로 통일역량의 부족과 민족내부의 분열에 대하여 피상적으로만 기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철저한 역사인식을 결여케 할 소지가 있다.

북한의 현실은 남한과 비교하여 자유가 없고 통제하에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동정심을 유도하는 식이었으며, 특히 교과서에 제시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사진자료들의 대부분이 '60~'70년대의 오래되고 낡은 모습만을 담고 있어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⁵⁰⁾

49) 남북분단의 국제적 요인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은 강대국들의 개입을 들고 있다. pp.213~215.

또 남북분단의 국내적 요인으로 우리 민족이 내부적으로 민족통일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노력이 부족했고 이념적으로 분열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pp.215~217.

50)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사진자료들을 보면 '기계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

이념문제에 있어서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나쁘거나 열등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우월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국방안보에서는 여전히 북한은 믿을 수 없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남한의 통일 방안이 북한의 통일방안보다 좋다는 식으로 기술되어져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학생들로 하여금 좋고 나쁜 흑백 논리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으며, 북한과 남한이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고 우월하고 열등한 상하관계에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부정적이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육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 내지는 앞으로 통일을 해서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 또는 형제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경우 “통일의 장애요인과 통일의 촉진요인”이 제시되어 있는데, 통일의 장애요인이 너무 많이 제시되어 있어⁵¹⁾ 이를 읽어본 학생들은 마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받기 쉽다는 점이다. 특히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주변강대국간에 조성된 새질서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서도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통일문제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촉진요인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 제시와 설명이 첨가되어야 한다. 일례로 우리 민족의 통일촉진 요인에는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역사

자’ (p.240), ‘북한 주민들의 단조로운 복장’ (p.255) 등과 같은 오래되고 궁핍한 모습의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저해하고 있다.

- 51) 통일을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첫째, 남북사회의 이질화현상, 둘째, 남과 북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서로의 체제를 부정하는 상호불신, 셋째, 북한이 아직도 대남격화 혁명노선 불포기로 민족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교류나 협력을 회피, 넷째, 통일을 위한 국제적환경의 미성숙으로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그것이 비록 우리 민족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을 무시하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pp.255~258.

의식, 기타 다양한 공통점들이 많다. 반면에 분열적인 요소는 두개의 대립되는 이데올로기뿐이며, 이제는 북한이 지향하는 공산주의 이념이 전세계적으로 소멸해 가고 있느니만큼 통합적인 요소는 그 어느때 보다도 증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통일 교육 현실을 돌이켜보면, 비판적 사고의 함양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북한 공산정권의 모순이나 실상을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도는 하지 않은채 비판적으로 사고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IV. 새 統一教育의 方向과 改善方案

1. 새 統一教育의 方向

남한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이 이념을 토대로 하고 민주주의 교육원리의 영향을 받아 교육목적은 개인의 자아실현, 인격완성, 국가사회 발전에의 기여 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같은 교육이념과 목적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사회적·경제적 지위 획득에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어 있다.

또한 해방이후 현재까지 교육기회 균등원칙에 따른 단선형 학제가 확립되었고 과학기술교육과 반공교육이 강조되어 있다. 한편 북한의 교육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한 전체주의와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다. 이러한 교육이념에 의하여 북한의 교육목적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는 것으로서 사상교육과 인력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교육이 사상·문예·교양의 무기이며 학교는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 수단인 동시에 주요무기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교육과 조기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방이후 현재까지 김일성 위상숭배 교육을 통하여 정치적 목표인 공산혁명의 완성과 전인민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 교육의 전역량을 투입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남북한간의 교육이념, 목적, 내용차이는 민족의 이질화를 심화시켰으며 특히 분단이후에 태어난 세대들간에는 더욱더 이질화를 고착화시켰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남북한 주민사이에는 세계관, 국가관, 역사관, 인생관이 달라졌고 언어, 사고, 가치관, 생활방식과 태도 등에 이질화를 가져왔다.

통일을 "일정 영역내의 이산 집단 내에서 개개인 간의 이해와 견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여 필요한 변경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인 공동체 의식(sence community)이 구성원들 간에 형성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기

구가 제도화 되어 있는 상태”⁵²⁾라고 할 때, 통일교육은 각기 다른 이질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간에 이해와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수단이다.

특히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통일 이후에 있을 상당한 상태로의 변화에 적응토록 하기 위해서도 통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이런점에서 통일교육은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공존교육과 통일 교육의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 단계는 통일공존 교육이다. 이는 통일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교육으로서 평화공존 시대를 거쳐 통일을 이룰때까지의 범국민적 교육이다. 지금으로서는 국제정세의 변화 및 남북한간의 합의서에 담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태도, 사고, 가치관 행동규범등을 습득케하는 교육이다. 즉 지난 40여년간 지속되어온 남북분단을 하루속히 극복하여 민족동질성을 찾고 자유와 복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실현되는 통일국가를 대비하고 완성시키는데 요구되는 지식, 태도, 가치관, 사고와 논의 능력배양, 행동규범과 절차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케 하는 학교교육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통일교육이다. 이는 통일을 이룩한 이후 통일국가를 완성하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화에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 태도, 가치관, 의식, 사고, 행동규범등을 습득케 하는 학교 및 시민 교육이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통일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의 영원인 통일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합리적, 객관적 사고와 진지한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인 통일공존교육이 절실하며 통일공존 교육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삶에 대한 대비의 내용을 다루는 동시에 우리의 생명과 체제 그리고 통일의 현실적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이루는 균형있는 통일안목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국제정세의 변화 및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은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따라 기존의 통일교육도 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증대

52) 이상우 편(1987), 「통일한국의 모색」, 박영사, pp.99~101.

되고 있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존의 반공·통일안보교육으로서는 이에 대응하고 한반도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미흡하다.⁵³⁾

따라서 새로운 환경여건에 맞는 통일공존교육이 필요하며 통일공존교육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속에서 한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구가하는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으로 민족통합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체득케 하며 통일된 조국의 세계사적 역할과 지위 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통일공존교육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및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간의 관계에 대비하여 통합된 민주국가로 동북아 및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처해 나갈 민족단위의 대비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간에는 체제와 이념의 대립속에서 전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동안 갈등과 불신이 쌓이고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통일전후의 사회적 혼란과 인식의 전환에 대비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합의서 내용 실천과 평화공존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중등학교에서의 새통일교육의 방향은 기존의 통일안보교육을 그대로 존속시켜 교육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통일공존교육을 실시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언제까지나 남북한이 서로 체제존속만을 고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남한이 먼저 성숙된 보다 차원높은 수준의 교육이 앞으로의 통일세대에게 필요하다고 할 때 지금부터라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미래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일공존교육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는 UN을 매개로 하여 실질상의 공존을 역사적으

53) 백종억(1992), 전거서, pp.199~200.

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는 거의 무장공존(Armed Coexistence)에 불과한 것이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및 실제적인 접근과 방법은 남북한의 '공존'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남북한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참된 '평화공존'이라는 원리에 익숙해지고 점차 평화통일로 가는 것이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분단의 통합'이라는 접근과 방법은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면서 통합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 역시 평화공존이라는 '분단의 해소' 과정없이 통일에로의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힘의 공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존의 길에 들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7·4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등이 '힘의 공존'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평화공존으로 나가려다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사실상 남북한이 '힘의 공존'이라는 단계에 익숙해지고,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를 인정할 때에 다음 단계인 '평화공존'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공존'이라는 단계는 남북한 간에 '힘의 공존'을 인정하는 단순한 정치적의식, 예로 상호불가침 조약의 조인, 평화조약의 체결, 남북정상회담 등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공식으로 발효시킴으로서 '평화공존'이라는 단계에 성큼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물론 남북한이 '평화공존' 문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나 다음의 논리적 단계로서 '경쟁적 공존'의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무기는 사용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리라 여겨진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 단계를 극복할 줄 아는 지혜로운 대내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공존'을 지지하여온 기반인 남북한 간의 '균형'은 군사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존'이 해소되기까지는 '공존'이라는 체제는 적대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가운데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체제적인 경쟁의 단계인 '경쟁적 공존'의 단계를 극복할 수 있을때에 다음의 논리적 단계인 '협력적 공존'의 단계가 이루어지며 남북한이 공히 각기 체제적인 이익에 손상을 입울때에는 '협력적 공존'의 길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존'의 논리와 실체가 현명하게 극복되었을때에 '공존의 해소'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 단계에서는 비로서 남북한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한반도는 '분단의 통합'이라는 접근과 방법보다는 '분단의 해소'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민족통합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⁵⁴⁾

결국 남북한의 통합이론과 실체는 역시 과정이라는 통일론을 지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도직입적인 통일이 아니라 분단요인들의 해소과정의 결과라는 것이 바로 통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단요인의 해소과정은 역시 남북한 양체제의 '공존'이라는 원리에서 가능한 것이다. 즉 양체제의 유지물 기초로 하는 분단의 해소인 것이다. 이는 양체제의 투쟁을 야기시키지 않고 통합에의 질을 트여놓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남북한 통일에의 접근과 방법은 과정론적 접근법과 공존의 방법밖에 더 이상 다른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⁵⁵⁾

따라서 남북한이 치열한 체제적인 공존과정, 즉 힘의 공존과 평화공존 또는 경쟁적 공존과 협력적 공존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중국적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공존의 해소' 단계로 들어설 때에 어느 체제가 살아남는가 하는 것이 판가름날 것이며 이 체제가 남북한 통합의 체제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사실상 공존이론은 현실적으로 체제를 달리하는 정치체제들간에 체계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같이 살아가는 방식에 합의하는 이론이다. 즉 공존이라는 원칙은 상대방 체제의 본질을 상호인정하고 '다른체제간의 관계'를 형성유지 한다는 원칙인 것이다. 현재 대만이 내세우고 있는 「평화공존과 상호번영」이라는 새로운 정책은 두개의 중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만이 인정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공존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시대적 조류는 탈냉전을 요구하며, 평화공존과 인도주의를 주창하는 변화속에 있는데 아직도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⁵⁶⁾ 그러므로

54) 이기택(1991), 전계서, pp.325~326 참조.

55) 서희수(1988), "개방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안보정책," 「북방정책과 이념교육의 개선방향」 한국반공연맹, pp.128~129.

56) 김학준외(1991), 전계서, p.73.

평화통일의 선행단계는 참된 평화공존의 구현이다. 서로 사이 좋게 더불어 사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전시켜야 하며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체제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한 평화공존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의 통일교육의 방향은 실용적이고 민족공존적인 접근방법인 올바른 공존교육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몽골과의 교역확대, 러시아 연방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정상화와 함께 경제·문화·예술등의 협력교류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고 보면 이제는 동북아의 국제정치구도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위상 설정과 함께 '반공교육'이라는 냉전지향적 이데올로기 교육에서⁵⁷⁾ '통일공존 교육'이라는 민족통일 지향적 교육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이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하기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면 한편이 다른 한편을 이기는 통일은 피해야 한다.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씩 단계적으로 통합의 정도를 높여가야 한다.⁵⁸⁾ 즉 통일 공존 교육의 구상에 있어서는 '이기는 통일'이 아닌 '함께 사는 통일'이 그 지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안보교육이란 용어도 7·7특별선언의 정신에 입각하고 민족화합의 취지를 살리고 '통일'과 '안보'의 상충되는 측면을 해소하려면 안보관련 내용을 공존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위치지어 이제부터는 통일공존 교육이란 용어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통일 교육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미의 반공·안보교육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하면 통일교육의 정립과 체제화에 혼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⁵⁹⁾ 즉 이제는 안보논리 대신에 대승적인 성숙한 차원에서 새로운 비전을 안겨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창출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새롭게 창출되어야 할 새로운 비전은 마땅히 통

57) 최영균(1987), "통일교육소고," 「새 교육」, 12월호, p.21.

58) 이상우(1990), 전개서, p.146.

59) 박용현(1988), "통일주역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민족지성」 4월호, p.216.

일을 위한 공존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과거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의 개념 및 내용·체제를 벗어나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통일국가 및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구상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통일국가 실현에 기여하고 새롭게 통일된 조국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국민적 가치관과 태도를 심어줄 수 있는⁶⁰⁾ 통일공존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새 통일교육은 통일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님과 동시에 한민족 전체의 공동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삶의 질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통일 이념에 대한 헌신 몰입과, 곧 도래할 통일 국가에서 책임있는 민주 시민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고무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체제성을 갖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새 통일교육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 民主市民을 培養하는 統一共存教育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차 이루게 될 통일조국의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기능하게 될 민주시민(Democratic Citizen)의 육성 내지는 남북공존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일세대의 배양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는 점이다. 북한주민들과 상대했을 때 건전한 민주적 사고방식을 동원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통일 조국 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볼 때, 지금까지 공산주의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우월성만을 강조해 왔을 뿐 민주시민의 육성에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민주시민적 자질 육성을 통해 통일실천역량을 증대하고 통일이후 민족성원 전체의 삶의 질(Quality of Life)향상에 핵심적 관건울 두어야 함에도 이제까지 그러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는 폐쇄되어 왔던 북한의 경직사회도 점차 개방과 개혁의 물결을 타게 되며 실용적이고 전문 테크노크라트 계층이 북한의

60) 백종억(1992), 전계서, p.208.

정치·경제·사회 각분야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리라 예상되는데, 그때에 그들과 상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여 건전한 민족적 사고방식을 동원한다는 것은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역량의 증대와 통일된 이후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 관건이 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품성을 통일공존교육의 중요내용으로 도입해야 한다. 통일에 이르기 위해, 또 통일된 이후의 삶을 위해 민주적 시민의 자질과 품성을 최우선적으로 배양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민주시민적 자질의 배양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고 상급학교, 고학년, 성인에 이룰수록 민주시민적 자질과 통일에 관련된 지식 및 행위 규범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보강하고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통일공존교육의 과정에서도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의식과 건전한 소양의 배양은 꼭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가속화하고 경제발전을 통한 훌륭한 민주사회 건설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지만, 통일공존 교육에 있어서도 그 바탕을 이루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민주시민의 육성은 우리 국민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주국가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라나는 세대를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할 때 우리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며, 민주사회의 강점은 통일의 강한 추진력이 될 수 있다. 통일 문제의 논의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발휘하여 통일 관련 제반 사회 갈등의 성숙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또 통일 이후의 남북의 이념,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차이에 서 발생하게 되는 생활습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해와 관용, 갈등사태의 민주적인 해결과 양보의 정신을 기반으로 할 때 민주주의 사회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공존 교육은 민주 시민교육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장차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통일조국의 한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 기대된다. 또한 통일 공존

교육은 학습자가 미래사회에서 충분히 성숙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인간으로 육성되도록 교수·학습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공존 교육에서는 지식과 이론중심보다는 즉 주로 민주주의를 제도와 이념으로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교육의 내용인 동시에 교육의 원리로서 다루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속에서 성장해 온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생활규범이 체질화 되어야 한다.⁶¹⁾

즉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공통된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할 때,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 결정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장차 통일세대들인 청소년들을 통일국가 속에서 책임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통일공존교육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시킬 때 통일문제 논의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발휘하여 통일 관련 제반 사회 갈등의 성숙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남북의 이념,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생활습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해와 관용, 갈등 사태의 민주적 해결과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기반으로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통일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일공존교육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보편성의 원칙과 훌륭한 통일세대를 육성한다는 특수성의 원칙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넓고 깊은 휴머니티를 지닌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 시민적 자질의 배양은 현재도 줄곧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통일된 이후의 상황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도덕·국민윤리 과목에서 행해지는 교육내용의 확대 적용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61) 추병완(1992), 견게서, p.184.

2) 民族同質性 回復을 위한 統一敎育

과거에는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태파악에 있어 동질성보다 이질성을 강조하고 확인하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나쁘고 남한은 우월하다는 식의 교육은 시정되어야만 한다. 정치·군사적 통합은 쉽게 이를 수 있으나 의식, 가치관, 생활양식의 통합은 한세대 이상이 걸릴런지 모른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공존 교육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1945년 해방 전까지 한반도는 동일 국가체제 형태를 가진 단일민족, 단일국가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근반세기 동안 남북한 쌍방이 서로 상이한 이념체제 및 제도를 확립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 간에는 오랫동안 교류와 대화가 단절되었고, 또한 국제적 냉전시대의 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은 남북한간에 커다란 이질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이질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고착화 되어 오랫동안 경쟁·대립·적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통일공존 교육이 다면하고 있는 최대의 당면과제는 반세기에 가까운 남북한 분단 상태에서 심화되어온 '민족이질화의 해소문제'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이질화의 정도는 이제 민족의 공동유산인 일상언어 생활에까지 심화된 상태이며 그로 인해 용어와 개념의 혼란이 가중되고 나아가 폭력혁명 노선에 입각한 왜곡된 민족관·통일관 등 까지 걸쳐 이제는 통일문제가 곧 '동질성의 위기 (Crisis of Homogeniety)' 상황을 극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될 지경에 이르르고 있다.⁶²⁾

즉 통일공존 교육을 전개함에 있어 최우선적인 과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에 상당히 진전된 이질화의 극복방법을 찾는 데 있으며, 이질화의 실태파악, 이질화 요인 과정분석, 더 이상 이질화를 촉진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정·통제하는 노력으로 남북한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62) 이정수(1985), "북한의 계급의식화 정책과 남북한 이질화문제," 「북한」, 1월호, p.123.

오늘날 南北韓 관계개선의 장애요인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민족의 이질화와 상호 불신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이질화와 불신은 종래의 냉전적 思考方式을 지속하는 한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질화를 초래한 근본원인은 민족의 전통성을 말살하고 공산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위적인 공산주의형 인간상을 양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민족화를 유도하고 있는 북한에 있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동족관념을 없애기 위하여 「부르조아 민주」, 「사회주의 민주」 개념 등을 도입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같은 남북 이질화현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마치 북한을 하나의 외국으로 간주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다.⁶³⁾

이와같은 남북이질화의 심화상태가 장기간 계속된다면 설령 어떤 정치적 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통일이 이루어 진다해도 같은 민족으로서 공동체의식을 발휘한다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통일공존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즉 남북 양측의 실정법에 따르면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구나 교육이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공존 교육은 남북한간의 이질화 상태를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진지한 모색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통일원에서 발표한 「남북한 사회문화지표」는 남북한 사회실상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이 요청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⁶⁴⁾ 남과 북의 삶의 지표를 비교 제시해 주는 8개 분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상호간의 이질화 내지는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분단 40여년의 반목과 증오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속에서 우리민족이 통일을 달성했다고 상정해보면 그 혼란과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통일 이전 20여년을 넘게 민족적 동질성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마련했던 독일같은 경우에도 통일후 경제적, 사회적 혼란

63) 이상우(1986), "한국의 안보환경", 서강대 출판부 제2집, p.687.

64) 「조선일보」 1992년 1월 29일.

이 자못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질화에도 불구하고 시대성 면에서의 공통점 때문에 동질화가 어려운 일만은 아니며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분단시점으로 되돌아가지는 복고적 통일이 아니라, 세계사의 진운과 궤를 같이 하면서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민족이 재결합하자는 뜻의 미래지향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민족이질화 현상을 타하기 보다 민족동질화의 가능성과 시대발전에 따른 인류적 보편성의 가치체계를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의 세뇌교육과 인위적인 이질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재결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의식구조는 아니다. 즉 적대감·불신·반목은 어느정도 공존의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구적이고 표피적인 현상일 뿐, 내면적인 민족감정까지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선 실천 가능성이 높은 것, 예를 들면 이념적 색채가 적은 학문분야나 예술, 스포츠등 부터 착수해 나가야 하며 보다 본질적인 조치중의 하나는 남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적대교육을 지양해야 하며⁶⁵⁾ 민족의 역사, 언어, 문화 등 뿌리를 재발견, 재해석하고 통일공존 교육을 통해 이를 확산, 심화시켜 오랜세월 통일문화 민족국가로서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와 동질성의 뿌리를 재인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서독은 통일직전까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국사와 세계사의 교과서 저자, 출판사 대표등을 위한 세미나를 1년에 1백여회 개최하고 '독일의 영광'이라는 교육용 영화를 제작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상영, '독일 민족은 하나이다.'라는 민족일체감의 조성교육을 실시하여 온바 있다.

우리도 남한과 북한 주민의 민족동질성을 촉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북한과 함께 새롭게 전환되어 문화·체육·학술·종교등 여러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 주민간에 민족적 전통문화와 가치를 공통으로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65) 박하일(1988), "분단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의 재 조명," 「민족재 결합의 모색」 제38집 국토통일원, p.9.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⁶⁶⁾

특히 독일 통일후 동서독 국민간의 정치성향 차이가 여전히 현격할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이질화가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거결과가 나타나 국민 통합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실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⁶⁷⁾

남북한이 통일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통일의 주체, 통일의 형태와 통일의 미래상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 전반에 걸쳐, 추구하는 목표와 기본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대결과 갈등구조하에서는 우리의 통일실현의 과정은 우선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적 동질성회복 밖에는 다른방법이 없다.⁶⁸⁾

남북이 서로 왜곡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이 이루어진 다 하더라도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갖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합의서가 발효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비준하는 등 한 반도의 화해협력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한교육도 단순한 안보강조교육에서 벗어나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통일을 대비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민족의 동질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학습내용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통일공존 교육은 학생들의 각종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편견 해소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民族共同體를 指向하는 統一教育

오늘날 남북한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민족의 이질화와 상호 불신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내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일 국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 주민이 민족공동체의 성원으로

66) 김학준 외(1991), 전개서, p.140.

67) 「조선일보」 1992년 5월 28

68) 이병용(1991), "남북대화 및 교류에 관한 쌍방 입장과 방향," 「통일한국」 7월호, p.19.

화합하고 협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또 통일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인식의 혼란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민족공동체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겠다.⁶⁹⁾

오랜 역사를 통해 이땅에 이루어 온 민족공동체 의식이야말로 갈라져 있는 민족을 하나로 묶어 놓고 있는 바탕이며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공동체적 삶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민족 공동체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교류·협력·개방을 통하여 사회·문화·경제 부문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공동체까지 만들어 통일을 이룬다는 통일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민족 공동체라는 말은 통일의 중간단계인 동시에 우리가 이룩하려는 최종 단계도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 민족 공동체는 한민족이라는 자아 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민족 성원 각 개인에 의해 준수되는 하나의 규범체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범 체제로서의 민족 공동체는 각 성원들이 믿고 따라야 할 이념과 생활 윤리를 제공하고 그것을 준수할 것을 각 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공존교육에서 이러한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첫 단계인 문화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사려 깊은 시도인 동시에 통일 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한민족 전체 성원의 이상적인 행동 양식을 실천해 나가려는 창조적인 가치 추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때,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의 이념은 한마디로 말해, '적극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민족의 자주성, 참된 평등주의의 구현, 정의와 민본주의 구현, 세계애의 고양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9) 신상조(1992), 전제서, p.43.

사실상 분단이 된 뒤에 양편의 교육은 상대편을 부정하고 증오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이용되었다. 남쪽은 반공산주의를, 북쪽은 반자본주의를 가르침으로써 항상 상대편을 비판하고 증오하는 자세를 갖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민족 공동체로서의 의식보다는 적대의식을 높이는 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분단 상황이 민족 공동체 의식의 유지와 교양에 큰 장애가 되었으며 교육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였다.⁷⁰⁾

통일환경의 대내외적 변화에 전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일정책의 기본시각을 남북한이 함께 잘 살아야 할 민족공동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뚜렷한 의지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의 남북대결시대를 청산하고 폐쇄된 북한사회를 개방으로 유도하며 그 상호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남북관계를 '선의의 동반자 관계'로 승화시켜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시대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민족통일에 접근하는 시각과 인식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을 경쟁과 대결, 그리고 적대시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일부로 포용하여 상호신뢰,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되어야만 대북한관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이번에 남북정부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 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결과 갈등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시켜 '和解協力時代'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民族共同體를 이룩하여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이룬 바탕위에서 점진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분단 40여년이 넘는 시점에서 남북한이 상호단결과 불신속에 민족자해 행위를 계속해 나간다면 민족 역량의 소모는 물론 민족자존의 기를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남과 북은 한겨레, 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공동체 의식을 조속

70) 김신일(1992),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p.301.

히 회복해 나가야만 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전환의 논리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아래 남과 북에 두개의 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화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민족통합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데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을 내외로 부터 고립시켜 결과적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꾀한다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서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내부적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어 남북한 사회의 균형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이 한단계 높아진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할 당위성을 충족 시킬수 있으며 실제로 남북한간의 지나친 경제적 격차나 세력 불균형은 오히려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건인력을 발휘해야만 민족애의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을 통해서 우리민족 모두가 복지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누려야 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과정이 당연히 실용주의적이며 합리적인 현실인식의 기반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통일의 과정은 남북한이 적대감정을 버리고 상호신뢰 회복을 통한 민족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통일공존교육은 민족결합지향의 교육이어야 하며 일차적으로 분단상태하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착화된 민족적 혈맥을 소통시키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하여 민족적인 생활감정과 의식을 소생시켜 민족공동체 형성을 조장하고 촉진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민족 공동체 형성은 통일의 기반이며 동시에 통일조국의 완성된 모습을 의미한다. 이것은 남북한 민족 구성원 전체의 당위적 과제이며 현실적 과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공동체 형성의 원리는 통합된 한민족의 존재양식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원리이어야 한다.⁷¹⁾

따라서 통일공존 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 속에서 한민족의 자존과 번영

71) 변진홍(1988), "남북한 화해시대와 민족공동체 형성," 「민족재결합의 모색」, 제38집, 국토통일원, pp.16~19 참조.

을 구가하는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으로 民族統合意識을 고취하고 통일
의 당위성을 체득케 하며 통일된 조국의 세계사적 역할과 지위 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만들어 가야만 하는 지고
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공존교육은 통일을 우리시대에 이루어야만 하는
단순한 당위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 현실적으로 혹은 잠
재적으로 연관된 모든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의
통일국가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책임감 있고 열린 의
식을 지닌 주체적 한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을 육성하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통일은 환희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충격도 함께 수반된다. 이 좌절
과 충격은 반드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야기시킨다. 사회적 갈등과 반목은 재분열
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 좌절과 충격을 딛고 일어서야만 통일 국가는 유지될 수
있다.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민족 공동체 의식이다. 이 민족 공동체 의식은
사회 문화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 공동체의 지향은 통일을 위해
서 뿐만 아니라 통일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다.

2. 改善方案

1) 教育内容面

지난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우리나라의 통일 교육은 근본적으로 반공 교육
이었다. 해방이후의 혼란상과 동족간의 전쟁상황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선택의 여지
가 없을지도 모른다. 본래 통일교육은, 남북 문제나 통일 국가 및 한민족 공동체 형
성에 관해서 국민 각자가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사실에 입각한 지식과 균형있는 사
고 및 논의 능력을 구비토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의 이와 같은
지식, 사고 및 논의 능력의 신장이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공감대로 확산되어서 민족
의 전체적인 통일 성취 능력과 통일 이후의 국민적 삶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통일교육은 냉전시대의 분단교육 형태를 극복하지 못한채 안보 논리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관 및 확고한 통일 의지, 나아가 민족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평화와 화해 시대에서 새 통일 교육은 불신과 대립의 냉전구조속에서 반세기를 살아온 남북한,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마음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탄력성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지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안보교육내용을 ①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제시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제고 ③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에 개편방향⁷²⁾을 두었으나 교과용 도서의 제재가 사회적·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였으며 제5차 교육과정에서 채택된 통일안보 교육에서는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반공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편향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동쪽으로서의 북한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의 남북한 UN동시가입, 합의서 채택 및 발효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통일환경을 수용하는데는 미흡하다. 따라서 최근의 국내외 정세 변화에 부응하여 통일교육내용에 대한 보완과 새 통일교육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5차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육과정에서는 이데올로기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영역(단원)과 북한 문제 및 통일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을 별도로 선정하여⁷³⁾ 대단원 VI. '조국의 통일과 번영'의 단원에서 '1. 조국의 분단', '2. 북한공산체제의 현실', '3.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의 내용이 있으나 실제로 3학년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제대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0여년간이라는 짧은 시간은 남북분단의 세월속에서 생긴 이질화현상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의 위상을 보다 올바르게 인식하는

72) 문교부(1989), 「고등학교 국민윤리과 교육과정 해설」, pp.167~174.

73) 상계서, p.157.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선교육현장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통일안보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술로 되어 있으며, 최근 통일 관련 매스컴자료에 비해 뒤져 있어 학생의 현실과 발달단계에 간격이 벌어져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행통일 교육은 인지적 비중이 높아지긴 했으나 지적인 수준이 소홀히 된 교육으로 인지적 근거가 약한 통일의식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진정으로 공존을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존을 위한 교육'이란 적극적인 관점의 형성이 요구된다.

교육목표의 설정이나 교육내용의 선정과 실천 및 평가도 이 관점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교육목표로서 민족공동체의 형성이라든지, 또는 남북간의 이질화를 방지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등이 설정될 수 있다. 교육 내용도 종전처럼 부정적인 것일 수만 없을 것이다. 교육 방법도 흑백 논리 위주의 체제 우월성을 비교하고 강조하는 것은 안될 것이다. 우리만이 옳고 북한은 무조건 그르다는 교육방법은 더이상 효과적이지 못하다.

오늘날처럼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북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는 학생들에게 기존의 주입식 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논리력이 발달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집단 토의 등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 판단케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관점에서 '공존을 위한 교육'이 실천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통일지향적 교육관과 함께 교육내용이 재조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의 통일 내용이 무조건 옳고 북한의 정책이나 실상은 무조건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방식의 우월성 논리는 민족 동질성의 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질화를 부채질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모름지기 통일교육 내용은 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남북한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수 있는 참다운 민족화합과 민족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게 함은 물론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도록 하는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인 성격을 띤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관련 교과서 내용의 주입식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인식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통일의지를 길러주기보다는 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주기 쉬우며 또한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관적 의식을 고취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공존 교육은 풍부한 자료와 정확한 정보등 교수 학습 매개물이 주어진 상태에서 탐구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자율적 판단과 지적 호기심을 존중한 바탕 위에서 통일의지와 실천역량을 스스로 배양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통일공존교육은 통일 정책이나 방법등에 대한 지식·홍보 교육보다는 태도·가치관·행위 규범의 측면을 중시하여 청소년의 지적·사회적 발달 과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상의 배려로 통일세대들에게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비판적 인식능력을 길러주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새통일 교육의 방향을 통일공존교육 다시 말하면 민족성원의 삶의 질의 향상과 민족사회 성원 모두의 공존공생에 둔다면 이 기본과제에 어긋나는 통일 성취 수단은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

즉 통일 교육과 관련된 교과외 통일 교육영역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부정일변도의 일차원적 수준에서 벗어나 공존을 이끌어 내는 보다 차원높은 내용으로 바뀌어야 하며 북한자료와 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북한체제와 실상을 정확히 교육시켜 북한체제의 취약점 뿐만 아니라 장점이 있다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성숙된 대북관이 정립되어야 한다.⁷⁴⁾

그러면 실제 어떠한 교육내용이 공존을 위한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북한 바로 알기'와 같은 교육내용이다.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이야기하되 최근 자료를 가지고 한다든지, 사진을 제시하더라도 너무 오래전의 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을 이야기 하되 일방적인 태도는 지양하고 그 가치관의 생배경과 기능 및 영향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을 우리의 적이나 우리와는 다른 인물로 표현하기 보다는 한 핏줄을 나눈 동족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새통일 교육 내용은 북한 주민을 화합의 대상으로 동반자로 생각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74) 윤병익(1988), "새정부의 통일노선과 남북한 관계개선 전망," 「민족재결합의 모색」 제36집 국토통일원, p.13.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공존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교육은 국민계층간 통일 의식에 대한 시각차를 용화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최근 남북관계와 대내외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안보체계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보완 발전시킨 「통일공존교육」이라는 새로운 통일 교육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공존교육의 기본방향은 통일이 관념이 아닌 현실문제이며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의 실천적 과제로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어야 함은 물론 민족 구성원들에게 자유와 인권, 복지를 약속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통일관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과 발전기회를 주는 반면 그 과정에서 고통과 희생도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하며 그동안 적으로만 보아오던 북한을 앞으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반자이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해 온 방심할 수 없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실체로 규정하는 한편, 기본합의서 발효에 따라 북한 체제의 비판이나 이질성 부각보다 민족공동체 회복·발전을 강조하는 전향적 북한관을 제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해협력시대의 새 통일 교육의 내용은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통일 공존 교육을 새로이 도입하여 통일국가 국민으로서의 동족감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방향 지워져야 한다.

2) 教育方法面

기존의 통일 교육은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감정과 정의적 측면을 중심으로 천편일률적인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수학습방법을 통한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제4차, 제5차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인지적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져 오고 있어서 변화된 위상을 보이고 있긴 하나, 아직도 북한과 공산당에 대한 경계심 내지 적개심을 강조하는 반면 통일에 대한 상상력, 논의 방식, 논의 절차, 통일 방안 등에 대한 평가적 안목의 육성에는 소홀히 하여 오고 있다. 6·25를 직접 체험하

지 못한 전후세대들에게는 동기 유발, 흥미 유지가 어렵고 그러다보니 설명·주입식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는 논리적 사고와 형식적 사고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에게 거부감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같은 면은 남북한 모두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부정적 거울영상'을 학습을 통해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본다. 북한 어린이들이 고생하는 것은 침략주의자 소련과 그 괴뢰인 북한 공산당 탓이고, 남한의 어린이들이 고생하는 것은 제국주의자 미국과 그 괴뢰인 남조선도당 탓으로 서로를 학습과정에서 인식케 함으로서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을 증대시켜 온 면이 있는 것이다.⁷⁵⁾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도 학교에서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음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다. 현재 중·고학생들은 통일의 터전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통일된 조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 통일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통일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여 통일세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통일교육은 그 실질에 있어 반공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냉전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을 우리와 경쟁하는 적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왔다. 통일교육의 내용도 학습자의 지적·사회적 발달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 지식과 사실을 중심으로 한 감정차원의 교육이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방법으로 이끌어져온 면이 많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분단고착의 교육이며 흑백논리의 편향된 ideology교육으로서의 한계를 보인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통일교육이란 것도 정치의 현실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고 보면 이 역시 어떤 측면에서 체제 경쟁적이고 적대감과 대결심만을 양산하여 온 면이 많았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⁷⁶⁾

따라서 일방적인 주입식 위주의 교육에 익숙해져 온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들

75) 박광주(1990), "남북대화의 새로운 모색," 민병천편, 「전환기의 통일문제」 대왕사, pp.360~361 참조.

76) 한만길(1989), "분단상황과 통일교육의 방향", 「새교육」, 1월호, p.29.

어가자마자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지식도 없이 우리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돌변하는 일을 살펴볼때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정위주의 흑백논리를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피교육자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수용하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 실시하여 왔던 통일교육방법이 한반도 통일교육환경 변화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공존 교육은 남북한이 상대방에게 정치 이데올로기의 강요나 설득을 지양하고 오로지 민족공영을 위해 실용주의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나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하며 서로 체제 경쟁적인 자세나 '나는 옳이고 너는 옳지 않다'라는 식의 '2분法的 思考'를 버리고 상호수용하는 공존교육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내용이 체제경쟁적이고 비방위주의 것이 아니라,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존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통일공존 교육도 주입식교육이 아닌 탐구학습과 토론과정을 거쳐 공동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고, 북한바로알기 운동을 통한 북한동포의 생활상, 북한경관, 사적지, 풍물, 사진자료, 북한 방문기 등 간접적 경험의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통일안보교육에서 흔히 보아왔던 부정일변도의 교육방법을 고수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적대적 2분법(Hostile Dichotomy)'의 사고방식을 학습자에게 주입하게 되어 남북한 문제에 대해 편향적 사고를 하려고 하므로⁷⁷⁾ 공존교육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공존교육의 실천과정에서는 남북한 체제의 여러현실을 고려하여 급진적인 변화를 취하지 않고 점진적이며 기능론적인 접근을 채택하여야 한다. 즉 남북한의 공존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방법에 대한 탐구를 학습자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새 통일 교육은 기존의 일방적 강의 방식보다는 실증, 사례 중심의 토의식, 탐구식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석·종합·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의 교육방법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77) 이태건(1985), "반공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자유공론」, 9월호, pp.82~83.

즉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은 냉전시대를 체험한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의식을 통일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비판적 성찰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주입하려는 전통적 교육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평화의식을 개발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통일 교육의 방법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상상력, 탐구력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교수 기법과 학습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방적이고 탐색적인 수업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상호 작용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경험의 확대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VTR, 영사기 조작, 현장견학 등의 시청각 학습과 함께 Role Playing, Simulation Game 같은 모의학습, 가상학습자료의 개발 보급도 필요하다. 또한 통일교육 전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통일 관련 연수기회를 보다 확충하여 교수학습방법의 심화와 개발을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공존교육은 남북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비판을 기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의 창'이나 '통일 전망대'같은 시사자료를 많이 공개하여 북한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사회가 더 좋다는 것을 오히려 더 느끼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과지도, 교과서 자료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으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는 입장과 동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하는 교육방법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⁷⁸⁾ 이러한 취지에 알맞는 학교에서의 통일공존 교육의 수업모델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VTR 映像資料를 活用한 授業

통일공존 교육은 학습자의 지적·사회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 지식과 사실을 중심으로 한 감정차원의 교육 즉 교사의 교과서 위주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방법보다는 미래통일국가건설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78) 교육부(199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교육월보」 3월호, p.19.

통일공존 교육 학습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도내용의 계열성을 분석해 그 학년에서 지도되어야 할 북한 현실과 통일공존의 지도요소에 합당한 남북한 영상자료를 추출하여 그것을 재구성하여 VTR자료로 수업에 활용하여 통일공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이같은 VTR 영상자료로는 현행통일관련 TV방송을 녹화하고 통일관련 VTR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적 본질에 맞게 재편집하고 영상자료의 적용시기를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수업의 전개 단계에서 처음, 마지막, 수시의 3단계로 구분,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면밀한 수업설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북한 영상자료를 그대로 여과없이 단순히 수업 때우기 식의 영상자료를 수업시 내내 방영 할 경우 비판적 기능이 강한 우리의 언론과는 달리 북한 TV 영상자료는 주민에 대한 계도성과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남북의 창'이나 '통일 전망대'를 활용할때 비디오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방영해 주기만 하면 가치관의 혼란이 오므로 반드시 교사가 마무리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통일에 관한 VTR도 시청한 후 교사가 학습내용을 반드시 정리해 주어야만 소기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학생들의 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VTR 영상자료만 방영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VTR자료활용은 정의적, 행동적인 태도면이 VTR수업으로 인한 지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일공존교육은 수업매체로 VTR자료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인지적 기반위에 정의적·행동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VTR 영상자료 제작활용 방안 : 이들자료를 학습목표에 맞게 효과적으로 제작·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학교급별 수준에 맞게 제작

ㄴ. 학습제재별로 대부분 유사한 VTR 영상자료를 몇개 선정, 수집하여 소요시간을 20분 이내 정도로 재편집 구성한다.

ㄷ. 학습제재별로 자료의 내용에 따라 그 적용시기를 3단계로 한다. 즉 학습동

기를 유발시키는 내용, 기본 원리나 개념을 이해시키는 내용,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수업진행 단계중 처음에 적용하고 본시학습내용을 정리하거나 보충심화 할 수 있는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적용하고, 자료화면이나 예시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적용한다.

② 재편집 구성된 VTR 영상자료(예시)

③ 수업지도안(예시)

表1. VTR 影像資料(例示)

지도 요소	소재제	주제	VTR 영상자료 내용	출처
통일	북한 공산체제의 현실	북한 체제의 특징	· 북한의 종교 -부처님 오신 날-	MBC 통일전망대 '92. 5. 11
			· 북한은 지금 -북한의 결혼식-	MBC 통일전망대 '92. 5. 18
			· 거래의 환호와 칭송 -7차 고위급회담 취재기자 좌담회-	KBS 남북의 창 '92. 5.22
			· 「조선말 대 사전」 출간 · 경제특구를 가다. · 북한은 지금	KBS 남북의 창 '92. 5. 29
			-교포의 생활상-	MBC 통일전망대 '92. 6. 1
			· 사회주의건설에 더 많은 통나무를 -압록강유벌사업소-	KBS 남북의 창 '92. 6. 5
			· 북한은 지금 -북한의 아파트생활-	MBC 통일전망대 '92. 6. 8
			· 고려의 수도 개성을 찾아서 · 북한의 결혼풍속도	KBS 남북의 창 '92. 6. 12
			· 북한은 지금 -북한의 외교관-	MBC 통일전망대 '92. 6. 15
			· 北 교과서의 6·25	KBS 남북의 창 '92. 6. 26

表2. 授業指導案(例示)

단원명	2. 북한 공산체제의 현실					
주제	(1) 북한체제의 특징					
학습목표	북한 체제의 전반적인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민족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다.					
수업매체	교사			학생		
	◎ 영상자료		◎ 교과서	◎ 교과서		◎ 노트
수업단계	수업요소	시간배당	교수·학습활동		수업매체	도착점
			교사	학생		
도입	문제의 재인식	5'	◎ 북한체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이 조국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 남북한의 체제는 어떻게 다른가를 질문한다. · 북한 사회체제의 특징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학습목표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다.		· 이 문제를 통해 오늘 공부 할 것은? ◎ 북한체제의 전반적인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	· 지명된 학생은 발표한다. · 학습목표를 인식한다.		
	<VTR상연전> · 북한의 현실은 어떠한가?	5'	· VTR 내용을 요약해 준다. · VTR을 시청하면서 요점사항을 제시한다.	· VTR을 시청하면서 요점을 정리한다.		

전 개	<VTR상영>	20'	· VTR을 상영한다.	· VTR을 시청한다.	VTR	
	<VTR 상영후> · 북한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 · 북한동포의 삶이 질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에 비추어 어떠한가?	15'	· 북한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이며 북한 사회 체제의 특징은? · 북한의 실체에 대한 우리의 갈등적인 인식구조를 파악하여 보자.	· 지명된 학생은 발표한다.		
정 리	본시 과제 정리 차시 예고	5'	·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 형성평가문제제시 ·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 본시 학습 정리 · 노트 보충 · 과제 제시 확인		
형 성 평 가	1. 북한 체제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2. 북한 경제 체제의 구체적 요인은?					

(2) 時事資料를 活用한 授業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문, 잡지, 관련서적등 생생한 시사자료를 수집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에 알맞게 지도해야한다. 실제로 현실과 교과서와는 괴리된 문제가 있다. 교과서가 쓰여졌던 때와 그 교과서가 학교에서 활용될 때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그때 그때 국제정세나 상황변화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시사계기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공존교육은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통일을 향한 마음자세

를 가다듬는데 도움을 주어야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적대감을 유발하거나, 북한을 실제이상으로 표현하여 동경심을 갖게 하지 않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① 시사자료 제작 활용방안

ㄱ. 학급급별 수준에 맞게 제작하여 단위수업시간에 활용되도록 소주제로 분류하고 분량을 중핵적 중심으로 명료화 시킨다.

ㄴ. 학생들에게 흥미있고 실증적인 자료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현실성 있는 것을 선정하여 재구성 한다.

ㄷ.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일 학습제재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정하여 구성한다.

② 재편집 구성된 시사자료(예시)

③ 수업지도안(예시)

表3. 時事資料(例示)

지도 요소	소 제 제	주 제	시 사 자 료 내 용	출 처
통 일	북한 공산 체제의 현실	북한 체제의 특징	· 생필품 · 식량난 겪는 경제실태	北 행복도 강요되는 땅, 연합통신, 1991
			· 법으로 본 북한의 인권	북한의 인권백서, 평화문제연구소, 1991
			· 언어와 은어를 통해 본 북한의 삶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조선일보사, 1991
			· 완전히 통제된 북한	북한 바로알기 7, 공보처, 1991
			· 사회체제의 특징	오늘의 북한, 교육부, 1991
			· 현실지향적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	북한, 북한연구소, 1992년 2월호
			· 북한헌법 어떻게 고쳤나?	통일로, 조선일보, 1992.5.14
			· 교류협력과 경제 시대	자유신문, 1992.5.23.
			· 달라지는 노동신문	통일로, 조선일보, 1992.6.5
			· 온성 · 길주	날아가본땅...북한, 조선일보, 1992.6.9

表4. 授業指導案(例示)

단원명	2. 북한 공산체제의 현실					
주제	(1) 북한체제의 특징					
학습목표	북한 체제의 전반적인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민족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다.					
수업매체	교 사			학 생		
	◎ 교과서		◎ 시사자료	◎ 교과서		◎ 시사자료 ◎ 노트
수업단계	수업요소	시간배당	교수·학습활동		수업매체	도착점
			교 사	학 생		
도입	문제의 재인식	5'	◎ 북한체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이 조국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 남북한의 사회체제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질문한다. ·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학습목표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다.		· 이 문제를 통해 오늘 공부 할 것은? ◎ 북한체제의 전반적인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	· 지명된 학생은 발표한다.		
	<시사자료 배부전> · 북한의 현실은 어떠한가?	5'	· 시사자료 내용을 요약해 준다. · 시사자료를 보면서 필기할 요점사항을 제시한다.	· 시사자료를 보면서 요점을 정리한다.		명확한 수업목표 인식

전 개	<시사자료 배부>	15'	· 시사자료를 배부한다.	· 시사자료를 숙독한다.	시사자료	
	<시사자료 배부후> · 북한사회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 · 북한동포의 삶이 질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에 비추어 어떠한가?	20'	·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이유는? · 북한의 문화·교육·언론등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지명된 학생은 발표한다.		
정 리	본시 과제 정리 차시 예고	5'	·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 형성평가문제제시 · 북한체제의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	· 본시 학습 정리 · 노트 보충 · 과제 제시 확인		
형 성 평 가	1. 북한 체제의 통치 이념은? 2. 북한 경제 체제 특징은?					

(3) 討議 學習

토의학습을 통한 탐구수업 모형을 정립하여 적용함으로써 탐구과정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능력이 함양되고 대화를 통한 논리적 사고력이 신장되어 민주주의 방식의 우월성을 체득할 수 있다.

① 토의학습단계

- ㄱ. 학습목표 확인단계 : 전시학습을 상기시키고 본시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 ㄴ. 가설과 학습목표의 관련단계 : 본시 학습 주제에 관련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문제의식을 명료화 한다.

ㄷ. 사실 및 문제 토의단계 : 연습과제를 중심으로 분단별로 과제를 분담해서 분단학습을 전개한다. 교사는 조정의 역할을 맡는다. 다음은 분단별로 분단장과 기록자를 정하고 분단학습을 전개하여 분단의 공동의견을 결정하거나 공동의 가치를 선택하도록 한다.

ㄹ. 사실 및 지식의 명료화 단계 : 과제별로 분단발표와 토의를 전개하여 보충 및 심화과정을 거친다.

ㅁ. 종합정리단계 : 분단별 발표와 토의과정에서 정립되고 선택된 개념이나 가치를 종합 정리하고 일반화 시킨다. 이때 교사는 관련자료를 투입하여 개념을 종합 정리한다.

ㅂ. 형성평가단계 :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재 투입 및 교정의 계기로 삼는다.

ㅅ. 차시에고단계 : 차시내용을 안내해주고 분단별로 연습과제를 제시한다.

② 분단조직

1개의 분단을 7-8명으로 총 5-6개 분단을 번호순으로 조직한다. 각 분단별로 분단장 1명, 기록자 1명을 두며 분단장은 분단토의시 사회를 맡는다.

③ 토의학습 기록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기록자는 토의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후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④ 토의 학습 수업지도안(예시)

表5. 討議學習 授業指導案(例示)

단 원 명		2. 북한공산체제의 현실				
학습주제		(1) 북한 체제의 특징				
학습 목표		북한체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은 조국의 통일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 여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안다.				
단 계	과 정	구 분	교 수·학 습 활 동		시 간	자료지도상의 유의점
			교 사	학 생		
접근 단계	문제파악·가설설정	주제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학습 중 중요 요소 확인 ○ 학습목표 확인유도 ○ 가설과 학습목표를 관련 지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학습 상기 ○ 학습목표 확인 ○ 예습과제 상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아드 자료 활용
문제해결 단계	탐색 및 자료 제시	문제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습과제를 중심으로 분 단별로 토의문제를 제시 한다. ○ 분단의 토의상황을 살핀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문제 ◇ 1. 북한 사회체제의 특징 2.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3. 북한 경제체제의 침체 요인과 실상 4. 북한의 교육정책 5. 북한의 문화적 특징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이용 안내 ○ 자발적 참여 유도
		지식·사실의 명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별 토의결과를 발표 시킨다. ○ 수정·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 결과를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에 입각한 발표
발전 단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정리 ○ 내면화 ○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을 종합 정리해 준다. ○ 형성평가 실시 ○ 차시내용을 안내해 주고 예습과제를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정리 ○ 질의 응답 ○ 예습과제 확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도 이용
형성평가	1.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북한동포의 삶의 질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V. 結論：要約 및 提言

1. 要 約

탈 냉전·탈 이념화 하고 있는 세계질서에서 한반도도 반목과 갈등,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민족화해와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국내외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이때, 보다 전향적이고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로 향한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고한 염원이자 민족적 과제이다. 그러나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혼란만 가중될 뿐이며 참다운 통일이 될수 없기 때문에 그 노력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추구할 때 과정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하는 것처럼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아무리 통일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지라도 그 실현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결코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할 수 없다. 통일의 당위성과 기대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로 가는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통일로 가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가장 예측 가능한 방법이 공존인 것이다.

통일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은 공존 공영의 관계를 정립해 나감으로서 가능하며 공존을 거친 다음에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통일된 후의 후유증이 최소화될 것이다. 즉 남북한 체제가 공존공영하면서 마지막 공존해소 단계에서 통일로 가는 체제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존과정이 수용되고 반영될 때에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체제경쟁은 지양되고 실질적인 민족통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민족생존권의 보장과 함께 이기는 통일이 아닌 함께 이루는 통일, 다함께 같이 사는 통일로 의식전환이 이루어질때 비로서 민족 공영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의 선행단계는 참된 평화공존의 구현이고 통일은 공존이라는 역사적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할 때에 비로서 가능한 것이며 앞으로의 통일공존교육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오늘날 민족 통합의 길목에서 현실적으로 직면한 접근이 통일인가 공존인가 할때 스스로없이 통일의 밑거름인 남북한간의 공존의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통일교육은 바로 공존교육을 통하여 북한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길만이 올바른 통일공존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자체보다 공존이라는 과정을 더욱 중시해야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신뢰 회복구축이 통일 기반 조성의 첫걸음이며 진정한 공존은 직접적인 적대감정을 해소시켜 남북한의 걸림돌을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해서만이 이룩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독일 통일과정은 우리의 통일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공존교육은 바로 통일후의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즉 통일에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진정하고 완숙된 통일을 지향하기 위하여 진행형과 미래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일공존교육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통일공존교육'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교육이며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통일공존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통일공존교육은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양상,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 등에 대한 강조교육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으로 방향 지워져야 한다.

통일공존교육은 통일을 지향해가는 과정상의 교육이며 또한 국가 안위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다. 물론 통일공존교육은 외부로부터의 우리체제 위협은 물론 내부로부터 나타나는 무분별한 과격행동 및 좌경사상까지 함께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공존교육은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한 바 없는 새로운 교육이며 또한 그

유대를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질화된 민족을 동질화시켜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일로서 새로운 관점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提 言

통일과 관련된 내외정세가 급격히 바뀌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일교육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사실 그 동안 활발히 진행된 남북한간의 통일문제는 주로 정치·경제·문화의 부분에서만 한정돼 왔으나 최근 상호 이질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교육분야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을 위한 노력 중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교육부문을 들 수 있다. 통일 교육은 교육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의 사회 문화적 통합은 전적으로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분야에서도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이후를 내다 보는 통일교육이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은 정치·경제 체제와 사회구조의 통합이라 할 수 있지만, 체제와 구조의 통합은 양 주민간의 의식과 가치관의 융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독일통일도 예기치 않은 문제점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아 왔다. 그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라고 한다. 즉, 통일을 대비한 교육을 소홀히 한데서 일어난 문제이다. 우리는 이를 교훈삼아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간과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가장 바람직한 통일교육이 '통일공존교육'이라고 할 때 '통일공존교육'을 위한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올바른 통일공존교육을 위해 민주시민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통일공존교육의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한다.

둘째, 통일공존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접 통일세대를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이다. 통일공존교육에서의 핵심적 사항인 북한을 바로 알고 우리를 바로 아는 객관적·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의 신장을 위한 전문적인 연수인 통일

공존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사들 자신이 통일공존교육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적으로 통일공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통일세대들 또한 올바른 통일지향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으로는 남과북이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통일안보교육의 중심을 공존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명칭도 '통일공존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네째, 통일공존교육이 실천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통일공존지향적 교육관과 함께 교육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교과서하에서는 통일공존교육의 당위성에 한계가 따름으로 성공적인 통일공존교육이 되도록 교과서를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제6차 교육과정 개정 때에는 교과서에 학년마다 통일공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내용이 배려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고등학교 윤리는 시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과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분량이 적은 편이므로 중학교 교육과정과 같이 학년별 교과서가 따로 필요하다.

다섯째, 보다 심층 깊은 북한 관련정보와 일차 자료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북한체제와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일공존교육에 알맞는 교재의 지침서가 필요하며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동반자로 부각시킨다는 원칙하에 남북한 공생·공영·공리관계를 강조하는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통일공존 교육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공존교육에 관한 시사성 있고 현실성 있는 자료로 학습목표에 맞는 기존의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쓰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권위있는 교육기관에서 통일공존교육과정에 알맞은 VTR 영상자료와 시사자료 개발이 요청된다.

參 考 文 獻

1. 韓國文獻

〈單行本〉

- 국토통일원 (1985), 「통일논총」, 5권1호.
———— (1985), 「통일논총」, 5권2호.
———— (1986), 「통일연구논총」, 6권1호.
———— (1988), 「통일연구논총」, 8권1호 통권 84호.
———— (1988), 「민족재결합의 모색」, 통일교육자료 제36집
———— (1988), 「민족재결합의 모색」, 통일교육자료 제38집
———— (1988), 「민족재결합의 모색」, 통일교육자료 제40집
김수용 (1990), 「전환기의 남북한관계」, 대왕사.
김신일 (1992),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김학준·김민하·안병준 (1991), 「민주화로 가는 길」, 도서출판 다나.
문교부 (1981), 「중학교 교육과정」
———— (1987), 「중학교 교육과정」
———— (1988),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 (1989), 「고등학교 국민윤리과 교육과정 해설」
———— (1989), 「통일·안보 교육지도자료」 장학자료 제60호.
민병천 편 (1990), 「전환기의 통일문제」, 대왕사.
박성조·양성철 공저 (1991),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 국민윤리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1992), 「고등학교 국민윤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이기택 (1991), 「한반도 통일과 국제정치」, 도서출판 삼영.

- 이상우 편(1987), 「통일한국의 모색」, 박영사.
- 이상우(1986), “한국의 안보환경”, 서강대 출판부 제2집.
- 정세구(1983), 「국민윤리교육론」, 교육과학사.
- 정세구·김항원·조남국(1984), 「도덕과·국민윤리과 지도법」, 교육과학사.
- 통일연수원(1992), 「민주통일론(통일문제)」, 통연 92-2-7.
- (1992), 「민주통일론(북한실태)」, 통연 92-2-8.
- 통일원(1990), 「통일문제연구」, 제8호.
- (1991), 「통일문제연구」 제3권 4호.
- (1992),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통권 제13호.
- 한국교육개발원(1992), 「중학교도덕 1」,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992), 「중학교도덕 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1992), 「중학교도덕 3」,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한국국민윤리학회 편(1991), 「사상과 윤리」, 형설출판사.

〈論 文〉

- 강광식(1992), “경제·사회 공동체로의 지향, 교류협력”, 「북한」, 2월호.
- 강근형(1991), “동북아 구조변화와 한반도”,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제2집.
- 고성준(1991), “독일의 통일과 북한의 변화 그리고 민족통일”, 「동아시아연구논총」,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제2집.
- 교육개혁심의회(1987), “교육개혁 종합구상” 최종보고서 Ⅱ.
- 교육부(199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교육월보」 3월호.
- 교육정책자문회의(1990),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정책자문보고 제11호.
- 김신일(1991), “민족통일에 대비하는 사회교육”, 사회교육연구 제16권, 한국사회교육협회.
- 김영찬(1988), “통일논의와 이념교육”, 「북방정책과 이념교육의 개선방향」, 한국반

공연맹.

- 김태완(199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교육월보」 1월호.
- 박경서(1991), "미소 불평등시대와 한반도 정세", 「외교」 제20호.
- 박권상(1991), "평화적 통일을 생각한다",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시아와 평화통일의 전망」, 한국국민윤리학회 제주지회 학술세미나.
- 박용현(1988), "통일주역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나", 「민족지성」 4월호.
- 서울특별시 초중등교과교육연구회 편(1991), "남북한 교육내용비교 분석"
- 서희수(1988), "개방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안보정책", 「북방정책과 이념교육의 개선방향」, 한국반공연맹.
- 신상조(1992),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교육월보」 3월호.
- 신철균(1988), "민족사상과 남북통일", 「민족지성」 4월호.
- 윤성한(1990), "성공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위한 제언", 「새교육」 7월호.
- 이병용(1991), "남북대화 및 교류에 관한 쌍방 입장과 방향", 「통일한국」 7월호.
- 이병희(1990),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민족통일논문」, 경상대 통일문제연구소 제 6집.
- 이정수(1985), "북한의 계급의식화 정책과 남북한 이질화문제", 「북한」, 1월호.
- 이중서(1990), "독일의 통일과 교육", 「새교육」 1월호.
- 이태건(1985), "반공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자유공론」, 9월호.
- 장하진(1991), "통일의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의 비판적인식」, 나남출판사.
- 전성홍(1991), "북한체제변화에 있어서 중국모델 수용고찰", 「북한」 11월호.
- 정세구(1989), "이념적 혼란기 극복을 위한 이념교육의 방향", 「이념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문교부.
- 최영균(1987), "통일교육소고", 「새교육」, 12월호.
- 추병완(1992),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새교육」 6월호.
- 최인화(1989),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전개방향", 「교원교육」 제

5권 제1호.

- (1991), “현행 통일안보교육의 현주소와 전개방향”, 「새교육」 1월호.
한만길(1989), “분단상황과 통일교육의 방향”, 「새교육」, 1월호.
현인택(1991),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한국 국민윤리학회제주지회
학술세미나(10.5) 발표 논문.

2. 西洋文獻

〈單行本〉

- Conze, W. (1958), *Die deutsche Nation* (Göttingen : Vandenhoeck and Ruprecht).
- Duchacek, I. D. (1967), *Conflict and Cooperation Among Nations*.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Gordenker, L. (1959),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 The Politics of Field Operations, 1947~1950*. Hague, Netherlands : Martinus Nijhoff.
- Jacob, P. E. and James V. T. (1964),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 Lippincott Company.
- Joy, C. (1955),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 Macmillan.
- Kim, Byong Sik. (1970), *Modern Korea : The Socialist North, Revolutionary Perspectives in the South, and Unification*.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 Kim, C. I. (1973), *Korean unification : Problems and Prospects*. Kalamazoo : Korea Research and Publications.
- Kim, Hak-joon. (1977), *The Unification Policy of South and North : A Comparative Study*.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im, Se-jin. (1976), *Korean Unification : Some Source Materials with an Introduction*. Seoul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 Kim, Young Jeh. (1980), *Roads for Korea's Future Unification*. Hong Kong : Asian Research Service, 1980.

〈論 文〉

- Ahn, Byung-joon. (1983), "Prospects for North-South Korean Relation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 (1982), "Unification of Korea: Reality and Polic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Chung, Chin O. (1982),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ast and Present." *Korea & World Affairs*.
- Kihl, Young Whan. (1982),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in the 1980's: An Assessment", *Korea & World Affairs*.
- Kim, Roy U. T. (1973), "North Korea's Relations with Moscow and Peking: Big Influence of a Small Ally." in Young C. Kim, ed. *Foreign Policies of Korea*. Washington, D. C.: Institute for Asian Studies.
- Kwak, Tae-Hwan. (1975),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Reunification."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Lee, Young Il. (1983), "Unification in the 1980's: New Approach for a New Era." *Korea & World Affairs*.
- Park, Joon-Kyu. (1971), "The Vicissitud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Unifications Policy." *The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
- Yim, Yong Soon. (1980), "The Prospect of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in the 1980's: The Inter-Korean Internal Political Perspective." *Korea & World Affairs*.

〈Abstract〉

A Study on Unification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According to Changes of Unification Environments

Jeon, In Bong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 Joon

This thesis aims at suggesting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and the ways for improving the unification education according to changes of unification environments.

Under the circumstances of out-of-cold-war and out-of-ideology all over the world, it is essential to perform more active unification programs of national level, removing hatred, conflict and consuming rivalr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has been our greatest wish and the national task to do. But most important of all is not when but how to attain Korean unification. However strong the national will of accomplishing unification may be,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unification should be made without th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ne, 1992.

peaceful, democratic and self-determined process of unification. The process is more important than the necessity and expectation for unification. And South's co-existence with North can be an example of the process. The unification by means of co-existence can minimize the aftermath of unification. When the peaceful, economic co-existence and the balance of power are attained between two Koreas, consuming rivalry of ideology will decrease more and more, and the actual moment of national unification will be prepared.

Therefore, prior stage for national unification is the realization of peaceful co-existence, and the unification will be possible only when we will overcome the difficult process of co-existence. Also, the forth-coming education for unification will have to be developed in this way.

Today, the answer to the question "Can co-existence be an approach to the Korean unification?" can be "Yes" without doubt and the most reasonable education for unification is thought to be that of South's co-existence with North. The real co-existence is possible only when there will be the establishment of confidence in each other and the removal of the feeling of hatred. Especially, the prospects for Korea's unification are good in that German unification brought about a great change in our view of unification.

So, the education of co-existence may be regarded as a way of diminishing the aftermath of unification, and as a way of advancing the time of unification. Now is the time when the change of idea about unification education is required.

The coming education of unification must be focused on how we will deal with the aspect of armed race between South and North and North's reckless ambition of occupation over South Korea.